

시민운동 종합정보지
월간 **경실련**

09 10
통권 142호 | 2014 10 호

우리는 이미 GMO를 먹고 있습니다

기획특집
2014년 경실련 하반기 사업은!

시사포커스
압장서서 학습 환경을 파괴하려는 이성한 교육부

국제개발리포트
Post-2015 HLP 개발어젠더와 건강:
보건인력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커버스토리
우리는 이미 GMO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미 깊숙하게 들어와
생활의 일부분이 된 빵, 식용유..
이 식품들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GMO가 들어와 있습니다.
경실련은 안전성 검증이 안된 GMO의
사용여부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미
GMO를
먹고 있습니다

경실련 | 공동대표 임현진 선월몽산 최정표 최인수 중앙위원회의장 박상기 상임집행위원장 김호균 정책위원장 채원호 사무총장 고계현
월간경실련 | 발행인 고계현 편집인 윤순철
편집기획위원 권오인 김상수 김한기 남은경 윤철한 정지영
발행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전화 02)765-6400 팩스 02)741-8564~5
편집디자인 ㈜현대아트컴 인쇄 ㈜현대아트컴 1990년 5월 24일 등록 서울라10131 2014년 9월30일 발행

CCEJ(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26-9 Dongsung 3gil Chongro-gu, Seoul, Korea
Phone : 82-2-765-6400 Fax : 82-2-741-8564-5 http://www.ccej.or.kr

CONTENTS

도시사

10 다시 태어나는 도시: 도시재생의 명암 / 류중석

동승동칼럼

16 2014년도 정부 세제개편안은 서민증세가 맞다 / 고계현

기획특집

19 ① 2014년 경실련 하반기 사업은! / 남은경

22 ② 참 '나쁜' 대통령을 향한 외침 / 홍명근

시사포커스

26 ① 앞장서서 학습 환경을 파괴하려는 이상한 교육부 / 윤철한

29 ② 우리는 GMO가 불안하다 / 박지호

통일마당

32 내 인생 최초의 통일교육 '한 여름밤의 통일인문학'을 마치며... / 최미영

안녕하세요? 회원님!

36 [인터뷰] 권소영 회원님

"우리 사회에 나비효과를 보여주는 경실련이 되길..." / 정지영

경실련 사람들

38 25살 경실련, 순천에서 만나다 / 유애지



26 시사포커스 1
앞장서서 학습 환경을 파괴하려는 이상한 교육부



32 통일마당
내 인생 최초의 통일교육 '한 여름밤의 통일인문학'을 마치며.

지역이야기

42 ① 자리다툼으로 얼룩진 광명시의회 오명의 역사 / 허정호

46 ② 연구단지 운동장에 경찰서 이전, 침묵하는 지방권력 / 조근래

48 ③ 대구지역 섬유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현실과 과제 / 조광현

50 ④ 新조계지와 카지노 / 조현근

문화산책

56 마음 아픈 곳 없이 괜찮은가요? / 최예지

동승동 책방골목

58 바람 부는 가을엔 사랑이다 / 박지호

59 '좋은 집',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인식되길... / 소지윤

국제개발리포트

60 Post-2015 HLP 개발어젠더와 건강:
보건인력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 변유진, 정혜주

회원기고

64 경실련과 함께했던 8주에 감사하며 / 임혜수

편집자에게

66 사람냄새가 나는 월간 경실련을 보고... / 황호식

회원게시판

68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경실련 일일보고

70 경실련 일일보고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공

72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42 지역이야기 1
자리다툼으로 얼룩진 광명시의회 오명의 역사



56 문화산책
마음 아픈 곳 없이 괜찮은가요?

다시 태어나는 도시: 도시재생의 명암

류중석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 <그림 1> 폐허가 된 미국 디트로이트 시의 공장부지 (출처: 위키피디아)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시도 태어나고 죽는다. 인구가 급속도로 팽창하는 시기에는 도시도 끝을 모르고 팽창했다. 그러나 인구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시기에는 도시도 쇠퇴의 길을 걷는다.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인하여 잿더미에 묻혀 사라진 폼페이나 미국의 역사탐험가 히람 빙햄(Hiram Bingham)이 발견한 잉카제국 최후의 도시 마추픽추(Machu Picchu)는 자연재해나 정복으로 도시가 사라진 경우이다. 인구 감소와 세수 부족으로 2013년 7월 파산 신청을 한 미국의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Detroit)는 잘 나가던 도시도 방심하면 한순간에 쇠락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닳고 싶어하는 나라인 한국도 이제 인구정체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어 도시쇠퇴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급속한 경제발전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신도시건설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지방도시의 원도심은 눈에 띄게 쇠퇴해가고 있다. 2013년 12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도 도시재생을 본격적인 국가 도시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도시를 제대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도시는 되살아 날 수 있다 - 영국 도시재생 사례의 교훈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국가였다. 맨체스터(Manchester), 셰필드(Sheffield), 리즈(Leeds)를 포함하는 중부지역의 삼각형 지대를 중심으로 철강, 기계, 방직 등 핵심산업이 일어났고, 이러한 산업을 바탕으로 뉴캐슬(Newcastle), 글래스고우(Glasgow) 등을 중심으로 조선업이 발달했다. 그러나 싼 임금과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하는 일본, 한국, 중국 등 신흥개발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영국의 제조업은 쇠퇴하기 시작한다. 당연히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였던 산업도시들도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1977년에 영국 정부는 '도심재생정책(policy for inner cities)'이라는 도시백서를 발간했다. 그 당시 단편적으로 시도되었던 도심재개발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도심 쇠퇴문제를 특정 지역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도심 전체의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정책을 수정했다. 또한 도심재생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해당사자들간의 협력과 조율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영국의 도심재개발은 새로운 차원의 전환점이 마련됐다.



▲ <그림 2> 1980년대 영국 보수당 정부하에 추진된 대표적 도심재생 프로젝트인 도크랜드스 재개발 사업 (사진출처: Hydrotech Resource Center)

1979년부터 시작된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1997년 노동당에 자리를 물려줄 때까지 민간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했다.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정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들이 대거 추진되었다. 템즈강을 중심으로 한 도크랜드스 재개발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민간을 중심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엔터프라이즈 존(enterprise zone) 정책도 시행되었다. 민간의 도시재생 사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90년대로 넘어가면서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하기보다는 경쟁적인 입찰방식을 통해서 지자체의 역량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지원예산이 중복지원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자 여러 종류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하나의 재정으로 묶은 통합 도시재생 예산 제도가 탄생했다.



▲ <그림 3> 타인(Tyne)강을 중심으로 음악당, 미술관, 그리고 밀레니엄 브릿지 등 새로운 기능을 도입한 영국 뉴캐슬(Newcastle)의 게이츠헤드(Gateshead) 지역은 폐허가 된 항구도시에서 잉글랜드 북부의 새로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다시 태어났다. (사진출처: www.openbuildings.com)

1997년에 집권에 성공한 노동당 정부는 장소에 기반을 둔 도시재생 정책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소외된 커뮤니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근린재생전략(local neighbourhood renewal strategy)’이 채택되어 도시재생 전략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과거 보수당 정권시절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도시개발공사가 존재하였다면 노동당 정권하에서는 도시재생회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도시재생회사는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없지만 중앙정부, 지자체, 의회, 민간기업 등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여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도무지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영국의 산업도시들은 보란 듯이 되살아 났고, 오늘날 영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 도시의 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 부처를 넘나드는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 둘째, 지자체간의 경쟁을 통한 역량강화, 셋째 커뮤니티

를 중시하는 도시재생의 철학,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을 도시 일부분의 문제가 아닌 도심 전체의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도시의 흥망성쇠: 죽어가는 도시와 살아나는 도시

우리 나라의 산업 중에서 가장 먼저 사양산업으로 떨어진 것이 석탄산업이다. 수요감소, 임금상승, 채굴여건 악화 등으로 석탄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자 정부는 1989년에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에 따라 주요 석탄 산지인 태백산 일대의 정선, 태백 등의 도시에 카지노를 허용하여 새로운 종합관광단지로 조성하는 도시 재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카지노 도입으로 지역경제가 오히려 더욱 피폐하게 되어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줄어들어 빈집이 늘어나게 되면서 주거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인근 음식점과 상점들도 매출이 감소하여 도시 쇠퇴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그림 4> 인구 감소로 빈 가구가 많아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강원도 태백시 통리의 한 아파트단지

인구 12만의 교육·문화·관광 도시인 충남 공주시는 백제시대의 도읍지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건설로 인하여 인구가 빠져나가 쇠퇴하는 도시이다. 지방도시의 재정악화, 도시 자체의 일자리 감소, 주변 도시로의 인구유출 등 3박자가 상호작용을 하여 도시를 쇠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심지역이 쇠퇴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나 공주를 비롯한 중부내륙도시들은 도시쇠퇴와 중심지가 쇠퇴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처방과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방의 내륙도시라고 해서 모두가 쇠퇴하는 것은 아니다. 전주시의 경우 한옥지구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정책의 지속적 추진, 아트폴리스를 표방하는 예술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도시재생의 모범적 성공사례 도시이다. 특히 음식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향토 문화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역사자원을 결합하여 전국적으로 도시재



▲ <그림 5> 문을 닫은 점포가 늘어난 공주시 도심상가

생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수원시는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주민주도형 도시계획과 시민예산감시제도 등 선진화된 도시계획 기법을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또한 수원형 마을만들기 사업인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공모형태로 추진해 주민역량 강화에 이바지 하고 경쟁을 통한 상호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수원시의 노력은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대상을 수상하여 그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도시재생을 위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정

정부가 도시쇠퇴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본격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연구사업을 시작한 것이 2006년이다. 당시 건설교통 분야의 연구개발(R&D)사업의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하고 도시재생 연구개발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를 시작하여 이듬해인 2007년에 도시재생사업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으로 국가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을 시작하였다. 총 8년간에 걸친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도시쇠퇴를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창원시와 전주시에 시범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2013년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이라 함)이 제정·시행되었다. 이 법은 도시재생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만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사업은 성공을 위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자.

도시가 건강하게 되살아나기 위한 조건들

도시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쇠퇴하는 도시도 하루 아침에 되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대부분이 단기간에 큰 성과를



◀ <그림 6> 전주 한옥마을 은행 나무 거리 (사진출처: 위키피디아)

보는 것을 전제로 추진한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경우도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마중물을 부어주고 있다.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 도시재생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제 도시재생은 정권이 바뀔다고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성질의 정책이 아니다.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마중물은 우물물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듯이 정부의 재정 지원도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건 변화에 따라 유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지자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는 도시재생 관련 예산을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는 행정체계의 정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역량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는 도시재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헌신적인 리더를 발굴하여 교육하고 그들이 앞장서서 주민들을 이끌고 나갈 때 우리의 도시도 건강하게 되살아 날 수 있다. **경**

2014년도 정부 세제개편안은 서민증세가 맞다



정부가 가격을 2천원 인상하고 앞으로도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담배값 인상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주민세·자동차세를 100%이상 인상하는 지방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서민증세라며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으나 정부는 서민증세가 아니고 지방재정과 국민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단행한 것이라 강변하고 있다.

현재 국가재정은 지난 MB정부의 무리한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등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한식세계화, 해외자원개발 등 무리한 대형사업 등으로 재정적자 폭이 누적적으로 커지는 상황이다. MB정부 5년 동안 총 재정적자액이 96조원에 달하는데 부자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수규모는 63조원에 이른다. 재정적자 2/3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임을 감안할 때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MB정부 4년간 증가한 85조 4천억 원의 순 국가채무 증가액도 부자감세나 대형 개발사업과 연계된 후유증임은 두말할 나위없다.

이런 배경으로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인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1조 1천억 원으로 당초 계획의 4배를 웃돌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노령화 가속으로 복지재정 등 지출이 증가함에도 세입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적자 폭은 커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재정상황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히고 재정적자 폭을 줄이는 등 재정 정상화와 복지비용 감당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고, 그 출발로 이명박 정부가 진행한 부자감세 항목부터 회복시키는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증세가 없어도 복지도 가능하고 경제도 살리면 재정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불가능한 주장을 되풀이 한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의 배경과 내용을 자세

히 들여다보면 '부자감세, 서민증세' 성격이 명확해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활성화를 빌미로 이른바 3대 세제(배당소득, 근로소득, 기업환류) 등을 도입하거나 다주택자들의 부동산임대소득과세를 연기해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MB 정부와 같이 지속하고 있다.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비과세기간도 계속 연기했다. 특히 현재도 과세가 가능한 9억원 이상 고액전세 임대소득도 과세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 배당소득 세제도 실시될 경우 종합소득 상위 1%에게 최대 4222억 원의 감세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주식수 1000주 미만, 보유금액 1000만 원 미만의 개미투자자 320만명에게 돌아가는 감세혜택은 54억원에 불과하다.

담배값이나 주민세 인상도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의나 형평성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지닌다. 이 두가지 세제 모두 소득 규모나 액수에 상관없이 과세되어 소득역진성이 매우 심하다. 즉 부자들에게는 부담이 덜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인상에 따른 부담이 심하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담배가격별 담배소비량 변화를 근거로 세수증가분을 추정한 결과 2조 8천억 원 가량의 세수증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소득하위 25% 흡연자가 소득상위 25% 흡연자보다 1,778억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세 인상이 불가피하다 강조하지만 OECD 국가들이 가격정책 시행 이전에 비가격정책(담배금연 광고)으로 매년 2%씩 흡연자를 줄여 나가는데 이와 같이 비가격정책도 시행하지도 않으면서 가격만 올리고 있다. 특히 이번 담배값 인상으로 개별소비세 항목을 신설해 국세로 1조7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려는 점을 보면 담배값 인상이 국민건강과 지방재정 확보보다는 이는 핑계에 불과하고 서민들의 돈을 털어 국세의 세수 증가로 활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 복지수요로 인해 지방세인 주민세 인상이 필요하다 강조하지만 이 또한 선결과제인 국세와 지방세 세목 조정 등과 같이 근본적인 조정제도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 없이 서민 등의 부담만 늘려놓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부자들에게는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으로 감세를 진행하면서 서민들에게는 국민건강, 재정확충을 위해 증세를 하고 있다. 조세정의나 소득재분배 원칙 없이 서민들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시키는 이러한 방식은 국민들에게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정치적으로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신 증가와 정책추진력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09년도 각국의 조세(직접세)와 재정지출(현금급여만 대상)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영국이 34.6%로 가장 높고 캐나다(26%), 일본(25.3%), 뉴질랜드(18.6%), 미국(15.2%) 등의 순이었고 한국은 8.4%로 비교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다. 조세와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한 것은 기본적으로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빈익빈 부익부만 심화되어 투자나 경제성장이 잘되지 않고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즉 식비 등 소비탄력성이 큰 서민들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내수진작 등 경제 활성화는 더욱 요원하다.

박근혜 정부가 진심으로 재정적자 폭을 줄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노령화 등 복지수요를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동산세 등을 증세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과 함께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의 원칙을 유지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어 서민들의 수입을 늘려 준다면 경기는 활성화될 것이다. **경**

2014년 경실련 하반기 사업인!

경제 · 정치 · 사회 ·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정책 감시 및 대안 제시 등

남은경 사회정책팀 팀장
nari@ccej.or.kr

경실련은 최근 세월호 대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속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거리행진 및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동안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의 공직개혁 운동, 경제정책 감시 및 대안 제시 활동,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 및 대기업 특혜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서민주거권 보장 활동, 소비자보호활동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실련 창립 25년을 맞아 지난 25년을 평가하고 향후 25년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분야는 양적완화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3대 패키지 세제 등 왜곡된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 삼성 상속증여 감시 및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대응으로 감시T/F를 구성하고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제안과 지배구조개편 과정의 감시활동을 전개하며,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적합업종 운영 평가 등의 활동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정치 분야는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및 공직개혁을 위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 입법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관피아 폐해 근절 활동, 상향제 공천제 법제화 등 정당개혁과 국회의원 선출제도 개선활동 등 정치개혁 활동을 진행하며, 법원개혁운동의 일환으로 법조일원화 도입에 따른 변호사평가제 및 변호사평가위원회 설치 활동 및 19대 국회(전반기) 법안발의 실태 및 국정감사 평가 등 의정활동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 분야는 의료 공공성 훼손하는 외국영리병원 저지 및 의료영리화 저지를

〈표1〉 2014년 경실련 하반기 사업 내용 소개

담당부서	하반기 사업 내용
경제정책팀	- 양적완화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비판 및 대안 제시 등 - 삼성 상속 증여 감시 및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대응 - 대·중소기업 상생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대응
정치사법팀	-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개혁 위한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 입법화 등 - 정당개혁과 국회의원 선출제도 개선 활동 - 법조일원화 도입에 따른 19대 국회 법안발의 실태 등 평가
사회정책팀	- 외국영리병원 및 의료영리화 저지 대응 -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제시 - 장기요양제도 서비스 질 제고 및 비리사학 근절 위한 감시활동
부동산 및 국책감시팀	- 서민 주거권 보장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입법청원운동 - 임차인 생존권 보장 위한 실태조사 공론화 및 시민캠페인 전개 -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산낭비 사례 조사
국제위원회	- 대외원조 책무성 강화를 위한 EDCF(유상원조) 운영실태 조사 등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 청원운동 - Post 2015 주요 이슈별 의견서 발표 및 포럼 등 대응
(사)경제정의연구소	-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대응 및 중장기적 발전 방안 마련 -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 및 포럼
(사)경실련통일협회	- 창립 20주년 맞이 대안적 통일론 및 새로운 통일운동 제시 -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발전방안 제시, 군피아 실태조사 등
(사)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대한항공의 미국대사관 숙소부지 호텔 건립 저지 운동 - 제2롯데월드 건립 관련 '싱크홀'에 대한 안전검사 촉구 활동 등
시민권익센터	- 모바일상품권 등 낙전에 대한 실태조사
소비자정의센터	- 보험소비자의 효용 증대 위한 실태분석 등 금융소비자 운동 - GMO 표시제도 개선 운동 -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의 추가 소송

위해 활동할 것입니다. 이에 의료 의료영리화정책의 폐해를 폭로하고 지역과 연대활동을 통해 지역 영리병원 추진 저지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요양제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활동 및 비리사학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을 전개합니다.

부동산 및 국책사업 분야는 서민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입법청원운동, 임차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공론화와 시민캠페인을 전개하며, 경제성 없는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산낭비 사례 조사 등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완화의 폐해에 대한 발표 및 감시 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위원회는 대외원조 책무성 강화를 위해 EDCF(유상원조) 운영실

태 조사와 토론회 개최 및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Post 2015 주요 이슈별 의견서 발표와 포럼을 통해 대응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제정의연구소는 사회적경제 발전과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대응 및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좋은기업상 시상 및 포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통일협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을 제시하고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며, 군피아 실태조사 및 코스 2기 등 회원활동을 진행합니다.

또한 도시개혁센터는 대한항공의 옛 미국대사관 숙소부지 호텔을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저지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교육부의 심의규정 제정 반대 행동과 시민캠페인을 전개할 것입니다. 제2롯데월드 건립에 대한 안전성 논란에 대해 주변 '싱크홀'에 대한 안전검사 촉구활동과 임시사용승인제도 개선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익센터는 최근 모바일상품권 등 선불형 지급수단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거나, 소멸시효가 경과로 인해 발생하는 낙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소비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정의센터는 금융소비자운동으로 보험소비자의 효용 증대를 위한 실태분석 보고서 발표, 공협상품 공시·표시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고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해 기업 공개질의, 홍보물 제작, 식약처에 대한 감사청구, 입법청원을 전개하며, 상반기에 이어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의 추가 소송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올해로 창립 25년을 맞아, 정체성 및 통합성 강화,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기반 조성 및 역량강화 사업, 경실련 <업무표장> 특허 등록, 경실련 CI 통일 등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지난 8월 중앙위원회에서는 <경실련아카데미> 설립 의결로 경실련의 임원, 상근활동가, 회원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이 출범하였고, 전국경실련의 통합성과 건강성 강화를 위한 지역경실련 규약 개정이 의결되었으며, 특허청에는 경실련<업무표장>등록을 신청하는 등 계획했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경실련의 '경제정의 운동 25년'을 성찰하는 기념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 **경**

참 '나쁜' 대통령을 향한 외침

경실련,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 및 공동 기자회견 개최

홍명근 (사)경실련통일협회 간사
lolen86@ccej.or.kr



▲ 전국 경실련은 지난 8월 2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전국 경실련은 지난 8월 29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부터 청와대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일호 특별법 제정도, 언제든 유가족을 만나겠다는 약속도, 세월호 이전과 이후 달라지도록 대국민혁신에 나서겠다는 약속도 모두 지키지 않았다. 후속대책 이행도 27건 중 고작 7건 이행에 그쳤다. 화려한 수사에 기대 본질적 문제는 모두 비껴간 셈이다.

물론 세월호 참사의 1차적 책임은 선장과 해운사에 있다. 그러나 구조 과정에서부터 사고수습과 후속대책 마련까지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정부의 최종 책임자는 대국민담화에서 눈물을 흘리며 밝혔듯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다.

지난 8월 29일, 유난히 덥던 그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후속대책 이행 등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행진에 나섰다. 행진코스는 대학로(마로니에 공원)에서 종로 일대를 거쳐 광화문, 경복궁역 그리고 청와대까지였다.

경실련이 이 정도 거리와 규모의 행진을 한 것은 25년 역사상 IMF 이후 처음이라 할 만큼 드문 일이다. 중앙경실련 뿐만 아니라 각 지역경실련에서 온 활동가들

참 '나쁜' 대통령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50여일이 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결단을 미루며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방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직접 약속했던 철저한 진상규명도, 여야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밝혔던 세



▲ 전국 경실련 회원 등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팻말과 노란 바람개비를 들고 거리행진을 했다.



▲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시작된 전국 경실련 거리행진은 세종문화회관을 지나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 경찰에 의해 거리행진이 멈춰진 전국 경실련 상근자 및 회원 등은 길에 앉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과 여러 회원 분들이 함께했다. 행진하는 내내 시민들 역시 박수로 행진을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분이 있었는데 하면 욱하고 손가락질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여기에서 세월호 참사를 두고 우리 사회가 확실히 양분돼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수 백 명의 어린 학생들이 사망한 이런 대참사에 이데올로기적 가치나, 경제적 득실이 있는 문제도 아닌데 왜 이처럼 국론이 분열되어야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서울 마로니에에서 시작된 거리행진은 세종문화회관에서의 기자회견을 거쳐 청와대로 향하던 중 경찰에 의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멈춰졌다. 역시나 경찰은 청와대까지 가는 길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 날 뜨거운 햇볕 아래 경찰벽에 가로막힌 우리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저 청와대로 가는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대통령이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수용할 것을 목청껏 소리쳐 외치는 것뿐이었다. 길바닥에 연좌하고 있는 우리 옆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은 우리와 묘한 대조를 이뤘다.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정부, 여당은 위헌이니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특검 제도와 다를 바 없다. 불과 몇 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특별검사 추천을 야당에게 위임한 전례까지 있다. 무엇보다 국민이 뽑은 지도자라면




▲ 전국 경실련 상근자 및 회원들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공동기자회견 도중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노란색 종이비행기를 날렸다.

‘법’이 사회적 약자인 유가족들을 위해 있는 것인지, 유가족과 싸우라고 있는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하지 않을까?

경실련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기자회견에서 노랑 종이비행기 수백 개 접어 날리며 그 종이비행기 담은 마음은 딱 하나이다. 바로 유가족의 주장하는 단 하나의 요구 사항인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나 몰라라 하고 철저히 회피하고 기만하는 대통령의 모습, 그것이 2014년 더운 여름,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박 대통령이 임기 내내 들을 말은 단 하나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앞장서서 학습 환경을 파괴하려는 이상한 교육부

윤철한 국책부동산감시팀 팀장
raid1427@ccej.or.kr



▲ 경실련 등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지난 8월 25일 서울 북인사마당에서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위해 상위법 위반하고 학습환경을 파괴하는 교육부 훈령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및 호텔 건립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규제완화라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

지난 9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토부 등 정부부처의 업무보고에서 한 말이다. 기업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라는 취지이다. 최근 경기를 띄우

기 위해 규제완화를 이유로 기업에게 이롭게 제도를 바꾸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학교주변 관광호텔건립 허용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주변에 위해 시설을 설치할 금지하고

있다. 50m 이내는 위해시설 설치를 전면금지하고 있고, 200m이내에는 심의를 통해 학습 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주변에는 가스 제조 및 저장소,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가축의 사체저장소 등 위험·혐오 시설은 절대 설치 못하고, 호텔을 비롯해 PC방, 유흥업소, 도박장, 폐기물수집장 등은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국회에 학교주변 관광호텔을 포함한 위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학교주변 호텔 건립을 위한 정부의 거짓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호텔부족과 일자리창출을 이유로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에 화답하듯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도적·법적으로 불가능한 송현동 호텔건립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리사욕을 드러냈다.

경실련은 이미 서울호텔 이용률은 78.9%에 불

법원, 학교주변 호텔건립 불가능

그 동안 대한항공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송현동(경복궁 옆 옛 미대사관 숙소부지)에, 그것도 학교(풍문여고, 덕성여고, 덕성여중) 주변에 호텔건립을 시도하면서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주변 학교로 호텔건립이 어려워지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학습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해 호텔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표1〉 2012년 서울 호텔이용률(전체)

구분	판매가능 객실수	판매 객실수	이용률 (%)	1객실당 평균 투숙인원 (명)
특1등급	3,800,943	2,952,794	77.7	1.59
특2등급	1,991,215	1,647,568	82.7	2.38
1등급	1,363,297	1,140,655	83.7	2.12
2등급	400,010	272,437	68.1	2.06
3등급	233,999	125,510	53.6	2.65
등급미정	224,262	181,540	80.9	1.93
소계	8,013,726	6,320,504	78.9	1.94
가족호텔	389,058	308,276	79.2	2.97
합계	8,402,784	6,628,780	78.9	1.9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보시스템 자료
주) 판매가능객실수 = 호텔객실수*연간 일수

과하며, 승인된 호텔이 지어질 경우 현재 객실보다 54.7%가 늘어나 공급과잉이 초래될 것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의 79.2%는 임시·일용직, 월평균 임금은 79만원에 불과하며 정부의 거짓말을 비판한 바 있다.

교육부, 학습 환경보다 기업의 돈벌이 우선

심각한 문제는 학습환경을 보호해야 할 교육부마저 나서서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을 전제로 한 훈령을 그것도 사회적 논의나 합의, 공표도 하지 않고 몰래 제정한 것이다. 그것도 100실 이상의 관광호텔, 대기업을 위해 특혜 훈령을 제정한 것이다. 제정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해 학교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려는 사업자를 일일이 찾아,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심의 시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을 설득(또는 로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나아가 호텔예약등급, 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 CCTV설치, 고용창출 등 학습 환경과 무관한 내용을 심의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결국 학습 환경이 침해되더라도 다른 요소에 의해 호텔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 송현동, 인천 효성동, 부산 수영만 등 전국적으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학교주변 호텔건립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부 훈령은 상위법 위반

교육부 훈령은 단지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을 넘어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부 장관이 법령상 근거 없이 학교주변 위해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학습환경 보호라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업자의 위원회 출석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해 역시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학교주변 호텔건립, 우리 사회의 원칙 파괴행위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은 학습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를 벗어나,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도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헌신짝 버리듯이 하는 정부의 잘못된 인식이 더 큰 문제다. 단순히 경제논리를 주장하며 학교주변 유해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외국 관광객 유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환경을 보호하는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실련은 인근주민과 함께 학교주변 호텔건립 반대를 위해 시민캠페인과 공론화 활동, 입법 대응, 교육감 훈령거부촉구 및 훈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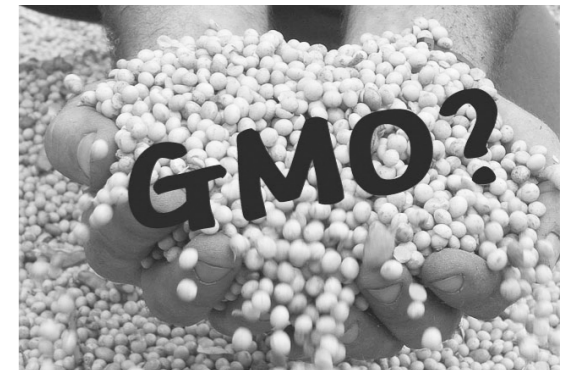
우리는 GMO가 불안하다

GMO농산물 다량 수입하는 CJ제일제당 등 GMO 사용 관련 정보 비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 GMO 표시 실태조사는 했지만 해당 업체와 제품은 비공개

박지호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jhpark@ccej.or.kr

나트륨? YES. GMO? NO.

나트륨(소금)을 과다섭취하면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중풍),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65만 명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은, 나트륨 과다섭취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앞장서서 나트륨 섭취를 줄일 것을 권고하며 관련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다고 나트륨을 아예 거부하거나 마냥 줄일 수는 없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하루 3g 이하의 나트륨을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관련 표시 등을 강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줬던 것이다. 이 덕분에 현재까지 소비자는 자신의 기호 또는 건강을 위해 소금의 섭취를 조절하거나 아예 먹지 않을 선택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관련 정책과 표시는 소금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GMO 상업화 이후 GMO가 포함된 식품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연구결과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나 회사 등에서 현재까지 무시당하고 있다. 이에 의식있는 소비자들의 여론에 의

해 겨우 GMO표시제도는 만들어졌지만, 그마저도 예외조항이 삽입돼 사실상 모든 표시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표시제 아닌 표시제가 되었다. GMO 앞에서 소비자의 기본권리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소비자가 불안하다고 주장하면 음모론이라고, 표시제도를 개선하자고 하면 불필요한 규제라고 반발하기 일쑤다. 이는 식품업계 뿐만이 아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그 필두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

GMO, 대체 어디에 사용되었나?

한국바이오안전성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0

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 약 266만 톤에 달하는 GMO대두가 식용으로 수입된 가운데 그 중 CJ제일제당과 사조그룹이 약 260만 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대상과 삼양제넥스는 GMO옥수수를 약 226만톤을 수입했다.

그 중 대표적인 식품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사조해표는 전체 GMO대두 수입량의 98.8%를, 대상과 삼양제넥스는 전체 GMO옥수수 수입량의 73.7%를 수입했다. 우리네 식탁에는 늘 이들 회사에서 만든 식품들로 가득차 있음에도 소비자는 알 길이 없다. 우리가 먹는 식품에 GMO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이다.

경실련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수입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해 식용유를 비롯한 각종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 수입산 농산물이 GMO인지는 아닌지는 확인이 불가능했다. 물론 GMO 관련 표시도 존재하지 않았다. 사라진 GMO를 찾기 위해 여러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완제품에 명기된 표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현행 표시제도로는 이들이 사용하는 GMO를 추적하기란 불가능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실시했던 전체 대상업체에 자사 제품의 GMO사용여부를 공개해줄 것을 질의했다.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만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을 뿐, CJ제일제당 등 GMO를 제일 많이 수입하고 식품업계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부분의 업체들은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놓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뒤

에 숨어 GMO 관련 정보를 퐁퐁 숨겼다.

〈표1〉 GMO 사용여부 관련 비공개 업체

품 목	업체명
건강기능식품	김정문알로에, 롯데제과, 서흥갑셀, 알피코프, 종근당건강.
당류	CJ제일제당, 대상, 오투기
빵류	CJ제일제당(뚜레쥬르), 삼립식품
식용유	CJ제일제당, 사조해표, 오투기
옥수수 가공품	농심켈로그
장류	CJ제일제당, 대상, 롯데제과(롯데마트), 사조해표, 움트리, 이마트, 홈플러스

하지만 피해는 정직한 기업에게 돌아갔다. 일부 기업들은 정보를 공개한 중소기업(제조사)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판매사 또는 판매처에서 해당제품을 수거해가라는 압박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허술한 현행법에 따라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몇몇하게 GMO 사용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한 기업들만 역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 정보를 비공개한 업체들은 오히려 뒷마당에 숨어 앉아 정직한 기업과 소비자를 비웃으며 안심하고 있는 꼴이 됐다. 이들이 자사 제품에 GMO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증은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CJ제일제당 등이 GMO를 다량 수입하고 있고, GMO사용여부도 비공개해 의심만 강해지고 불안은 더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이 GMO를 원료로 사용하였는지 확인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 제품 선택에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 소비자 인식조사를 직접 실시한

결과, 80%가 넘는 소비자들이 현행 GMO 표시 제도를 원료사용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무의미한 논란을 만들어 불안감을 키우지 말라며 시민단체의 활동을 비판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식약처는 시민단체와 기업들의 싸움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보며 방치하고 있다. 오히려 GMO 관련 논란을 거부하고 관련 정보를 차단하며 소비자 권리를 짓밟고 있다. 식약처는 GMO 표시 적정성 검사를 실시했으나 단 두 건의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했을 뿐, 대부분의 검사대상 제품은 GMO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DNA나 성분검사 없이 업체들이 GMO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밝혀낸 시민단체보다 식약처가 일을 허투루 하는 것일까? 식약처는 GMO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 사례를 열심히 찾은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으며 식약처 본연의 의무에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경실련은 그런 조사결과에 강한 의구심이 들어 명확한 조사 업체와 제품의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식약처는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며 강하게 공개를 거부했다. 법을 어기지도 않았고, GMO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의 명단이 왜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식약처 이외엔 그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다.


GMO에 대한 불안감은 그들 때문이다

소비자는 GMO표시를 명확하게 하라고 요구한다. 식약처는 이러한 요구에 ‘노력하고 있다’,

‘GMO는 안전하다’라는 대답만 반복하면서 업체의 영업이익 침해라고 관련 정보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는 자신이 먹는 제품에 GMO가 포함됐는지 알고 싶어 한다.

식품업계는 협회 뒤에 숨어 자사의 이름을 당당하게 언론에 공개하지도 못하면서 ‘소비자가 막연하게 GMO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표시를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결국 모든 피해는 소비자들만 온몸으로 받고 있다. GMO가 안전한지 불안정한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개발사인 몬산토도 모를지도 모른다. 향후 GMO를 나트륨과 같이 섭취를 일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드러난다면, 그 뎀 이미 너무 늦어 회복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실험용 모르모트가 아니다. 식량자급률 운운하며 수입의존도를 높이고,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만 있는 GMO 재배지를 그저 대책 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 현실이 불안하다.

GMO에 대한 불안감은 막연한 게 아니다. 소비자가 GMO에 대해 불안해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정부와 업체들이 투명하게 GMO 사용여부를 공개하고 표시제도 개선에 노력한다면 그 불안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정보를 퐁퐁 숨기는 정부와 업체의 행태들은 소비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며 우리를 조금씩 병들게 하고 있다. 이제 그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 차례다. 

필리핀

2014년 9. 10일



내 인생 최초의 통일교육

‘한 여름밤의 통일인문학’을 마치며...



최미영
광명경실련
상근활동가



▲ ‘한 여름밤, 통일 인문학 한마디’라는 주제로 (사)경실련통일협회 등이 공동 주최한 통일 인문학 강좌가 총 4주에 걸쳐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개최됐다.

2011년, 광명경실련을 처음 접하게 된지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양한 회원교육이 있었음에도 저의 참여도는 0%였습니다. 2014년 광명경실련에서 예비활동가 과정을 지내고 있을 때 까지 말입니다.

내 인생 최초의 통일교육 ‘한 여름밤의 통일인문학’과정은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던 저의 생각에 조금이나마 작은 구멍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과정부터 대학교 과정까지 16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저는 통일에 ‘통’자도 들어간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북의 문화적 괴리, 가치, 소통, 화합 등 통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

남북이 분단된 이후,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로 대한민국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왕정체제에 가까운 국가를 형성하며 분단 이후 오랜 기간 중국을 제외한 주변국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동해와 서해로 미사일을 발포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며,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위태위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미디어는 자극적인 기사만을 내보내고, 국가는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일에 관한 이야기가 활발하지 않고, 통일을 원하는 의지조차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 잘못된 상식과 견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4주간의 통일인문학 여정입니다.

첫 번째 교육은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전영선 교수의 『남북의 언어 차이와 거리』였습니다.

“분단이 된 지 70년이 되어가는 지금 남북의 언어차이는 점점 급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억양이나 단어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을 서로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게 첫 번째 강연의 주요 내용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거운 강의가 아니라 문화 대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강의 내용은 다시 한 번 가장 기본적인 것을 돌아보게 만들어 주는 강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김면 교수의 『독일통일 과정과 문화 후유증』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강의였습니다. 다만 이 강의를 듣고 난 후 ‘통일을 하지 말아야 하나’라는 착각을 불러올 수도 있으나 강의의 본질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강의중의 하나로 다양한 자료를 통한 유쾌한 해설과 함께 호기심을 가득 채워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독일 통일과정의 주요인물, 교육, 문제점 등 다양한 방면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가



오는 문제점들이 더욱 크고 그에 해당하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강의였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이병수교수의 『남북한 가치관의 차이와 소통』에 대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중년의 수강생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은 진중한 강의시간. 남북의 이념과 가치관으로부터 오는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에 고민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교육에서는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전영선교수의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과 문화통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현 주소를 들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적응의 어려움과 그들이 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차가운 시선들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북한이탈주민을 만났을 때에 제발 하지 말았으면 하는 질문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질문들은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직접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익적·전문적인 통일 교육

통일인문학 교육시간을 가지면서 의아하면서도 좋았던 점은 경실련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 분들의 높은 참여율이었습니다. 통일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 저의 예상보다 많음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면서도, 수강하신 분들의 연령대가 전체적으로 높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조금 더 젊은이들이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교육이었습니다. 경실련통일협회에서 진행하는 통일 관련한 교육은 공익적이며 전문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하기에 제대로 된 홍보와 통일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좀 더 재미있게 풀어간다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통일교육 4주간의 여정이 종료된 지금, 저는 여전히 통일이 시급한 일이라고 피부에 와 닿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통일과정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25년이 흘렀지만 40년이라는 분단기간의 세월의 아픔을 아직까지 치유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반도의 통일과정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한반도 통일을 이루려면 하루빨리 분단의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이 분단국가가 된 지도 어느덧 70년이 되었습니다. 통일정책이 지금처럼 소홀히 다뤄진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한반도 통일은 더더욱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40년의 분단기간에 대한 상처를 아직까지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70년이 넘는 분단기간의 상처가 아무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남북을 한 나라로 생각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이 갖추어질 바라며, 그런 주체의 역할을 경실련통일협회와 경실련회원들이 해낼 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 참 좋겠습니다.

끝으로 흥미로움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통일교육, 다양한 연령대가 즐거워할 수 있는 통일교육을 또 다시 기대합니다. **경**



“우리 사회에 나비효과를 보여주는 경실련이 되길...”

권소영 회원 인터뷰

정지영 회원홍보팀 간사
jj500@ccej.or.kr

무더웠던 여름이 어느새 저만치 물러가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지나쳐 어느덧 가을에 와 있는 요즘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회원님과 인터뷰를 할지 고민하다가 젊음과 열정으로 20대를 보내고, 사회에서 선배와 후배 중간 다리 역할을 자처하며 처절하게 온몸으로 풍파에 맞서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30대를 타깃으로 잡고 회원님 섭외에 들어갔습니다. 고심 끝에 이번 인터뷰 대상으로 경기도 안산에서 살고 있으며 현재 비서 업무를 하고 계신 34세 여성으로 언젠가는 전업 예술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권소영 회원님으로 정했습니다. 저희는 회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인터뷰를 하길 원했으나 회원님의 시간상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전화를 걸었을 때 낭랑한 목소리로 반갑게 받아주셔서 ‘역시 비서구나!’라는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Q. 지금 이 순간~!! 이 인터뷰하기 전까지 무슨 생각과 고민을 하고 계셨나요?

A. 방금 전까지 생각했던 건, 10월에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에 가볼까 해서 설레임을 가득 안고 스케줄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큰 고민은 여행과 대학원진학이에요. 현실적으로 경제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쪼들리지 않고 저의 취미생활과 공부 모두를 다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Q. 요즘 경실련 활동 어떤 것들을 주로 듣거나 보고 계시나요?

A. 경실련 회원으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뉴스나 월간 경실련을 보면서 관심을 갖고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일이 많다 보니 챙겨보지 못해 방금 검색을 해보았는데 세월호사건, 담뱃값 인상 등 최근 이슈에 대응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네요.

Q.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슈가 있으신가요?

A.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의 변화예요. 우리나라가 왜 도덕 불감증과 사건·사고, 비리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해져 가는가 하고 생각

해 보니, 인성교육이 부재된 상태의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온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몰 개성화와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시 되는 결과와 성과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 무엇이 옳고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고 개성과 자기성찰이 상실된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수학 공식을 암기하지 못해도, 돈이 없고 못생겨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개성이 존중받고, 사람다운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조금 더 살만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교육의 변화의 첫 단추로 우리나라의 공교육에서 개인의 맞춤 커리큘럼이 실행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정말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Q. 경실련 활동 중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요?

A. 조금 더 전방위적인 활동을 했으면 해요. 시민단체는 일반 타 단체와는 다른 칼같이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요즘 많이 무딘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더 날카롭게 정부의 잘못된 시책과 사회의 부조리함에 맞서서 역동적인 활동을 해주시고, 언론이나 다양한 행사의 루트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 더욱 많은 시민후원을 유도해 활동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Q. 반대로 경실련 활동 중 잘한 부분이 있다면요?

A. 경실련은 정부 보조금 없이 시민의 후원으로만 활동을 하다 보니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 많이 힘들다는 점 알고 있어요. 그래도 사

회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꽤나 중립적 자세로 다방면한 활동은 잘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Q. 지금 회원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가요?

A. 이 인터뷰를 하는 것이 힘드네요. ^^; 저의 인터뷰가 월간지에 실리면 다수(?)가 볼 텐데, 말을 잘 해야지 하는 부담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즐거워요. 왜냐하면 슬프게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업상(?) 저의 의견을 피력하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답답했는데, 이 기회로 이런저런 저의 생각을 말하게 되어서 기뻐요. 그리고 보니 힘든 점보다는 즐거운 점을 이야기 하고 있네요.

Q. 경실련에 바라는 점은 있으신가요?

A. 우리 사회에 나비효과를 보여주세요. 시민단체나 개인의 활동은 작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힘겨울 수도 있는 작은 날갯짓을 시작으로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면, 그것만큼 보람 있는 운동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지면 관계상 다 실지는 못했지만 인터뷰 하는 중간마다 ‘까르륵’ 웃으시는 권소영 회원님의 긍정적이고 활기찬 에너지를 받아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며 기회가 된다면 한번 직접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원님, 앞으로 있을 신입회원의 밤이나 후원의 밤 등 경실련 행사에 꼭 오셔서 직접 뵙길 희망합니다. **경**

25살 경실련, 순천에서 만나다

제13기 2차 중앙위원회

유애지 정치사법팀 간사
aejiyu@ccej.or.kr



▲ 지난 8월 22일과 23일, 전남 순천시 국제습지센터에 전국 경실련이 모여 제13기 2차 중앙위원회 및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전국의 경실련 식구들은 모두 순천을 찾았습니다. 하반기에 경실련의 할 일과 방향을 이야기하기 위한 제13기 2차 중앙위원회가 순천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 언제나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국의 경실련 사람들이 제각각 열심히 달려 한 곳에 모였습니다.

2014년은 경실련이 꼭 25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9년 창립 이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서 쉬없이 달려왔던 경실련이기에 25살이 되는 올해에는 사회를 위해 열심히 달려 나가면서도, 내적으로는 조금 숨을 고르며 좀 더 멀리 그리고 힘차게 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하반기 경실련의 활동 방향에 대한 모색과 더불어 경실련 25주년을 맞아 경실련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내실을 다지는 일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 제13기 2차 중앙위원회 및 정책협의회에서는 4개조로 나눠 4개의 이슈를 가지고 분임토의가 진행됐다.

이러한 논의는 분임토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직진단 및 쇄신 방향’(제1주제), ‘경실련아카데미 활동방향’(제2주제)에 대해 각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이 있었습니다. 3주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경실련 운동 방향’과 4주제 ‘지방선거 이후 경실련 자치·분권 운동 방향’에 대한 토론도 함께 열렸습니다. 열린 분임 토의의 결과는 이어진 본회의에서 보고되었습니다.



▲ 지난 8월 22일 전남 순천시 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경실련 중앙위원회 및 정책협의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조직진단 및 쇄신 방향> 분임토의에 대해서는 정지영 간사(중앙경실련)가 조직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통합성 및 건전성을 실행하기 위한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1주제 분임토의에서는 발제자가 상임집행위원회의 조직운영 쇄신 방안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위원들은 임원의 정기적 교체의 어려움, 사무국 인력과 능력의 한계, 재정 확충 여건어려움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함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향후 실무적 추진과정에서 이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경실련아카데미 활동 방향> 분임토의 결과는 홍명근 간사(중앙경실련)가 교육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신입간사교육은 전체 경실련을 대상으로 연 2회 통합 진행하기로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회원과 시민들에게 경실련을 홍보할 통합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회원·시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 교육방법도 온라인 및 동영상 등 다양한 수단 활용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 경실련의 운동 방향 중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경실련 운동 방향>에 대한 분임토의 결과는 김세현 부장(광주경실련)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여야 정치권과 당사자 조직, 시민사회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면서 대응하고, 중장기적 전략 수립을 위해 9월중에 경실련 워크숍을 갖기로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지방선거 이후 <경실련의 자치/분권 운동의 방향>에 대해 모색한 분임토의에서는 제도개선방향으로 헌법의 분권적 구조로 전환,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제도화, 자치경찰제 단계적 실시, 재정권한의 이양, 위기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이 제안되었으며 중앙과 지역이 함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유애지 간사(중앙경실련)가 보고했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주로 조직 쇄신과 발전을 위한 안전들의 토론과 의결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경실련의 상근활동가와 회원, 시민들에게 경제정의와 사회정의의 교육 훈련을 하기 위한 경실련 아카데미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중앙 및 지역경실련의 임원, 상근활동가, 회원, 시민들에게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등 교육훈련을 위한 조직의 설치가 필요함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어 사전에 분임토의 등에서 논의되었던 조직의 쇄신 방안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었습니다. 위원들은 공동대표와 재정과의 연계성, 임기의 제한에 따른 지역인적자원의 한계, 지역임원의 정치활동 허용의 범위 등을 지적하면서 지역경실련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적용을 제안하였고, 향후 조직위원회의 실사과정에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의의 마무리는 역시나 '우리의 다짐' 낭독이었습니다. 경실련 위원들은 매 중앙위원회 회의마다 '경실련 우리의 다짐'을 낭독하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경실련은 이 시간을 통해 '모든 사회적 억압, 차별, 불의와 빈곤을 추방하여 자유와 정의가 충만하여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의 건설을 지향한다'고 다짐하면서 '항상 시민들의 비판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들에 의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경실련의 한 가족인 회원, 자원봉사자, 임원, 상근활동가는 모두 평생의 진정한 친구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한다'고 되새기기도 합니다. '경실련 우리의 다짐' 속에 경실련의 지향점과 운동 방향 등 이른바 '경실련 정신'이 모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듯 의미있는 '우리의 다짐' 선창은 매 회 남녀 신입 활동가들이 하게 되는데, 이번



▲ 우리의다짐_이현아 중앙경실련 간사와 김세현 광주경실련 부장이 함께 우리의 다짐을 낭독하고 있다.

중앙위원회에서도 역시 새롭게 경실련의 일원이 중앙경실련의 이현아 간사와 광주경실련의 김세현 부장이 맡았습니다. 두 활동가의 선창에 따라 참석위원 전원이 기립하여 '경실련 우리의 다짐'을 함께 낭독하며 길었던 회의를 마무리지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친 경실련 식구들은 회의장이었던 국제습지센터를 떠나 순천만 인근 숙소로 향했습니다. 바로 경실련 중앙위원회의 핵심 이벤트(!)인 팔도음식 나누기 친교의 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각자의 지역에서 열심히 뛰느라 자주 만나기 힘든 전국의 경실련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소회를 나누는 흔치 않은 자리이기에 순천만에는 밤 늦도록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흥겨웠던 품바 공연은 이번 이번 중앙위원회만의 이벤트! 순천만의 철새들을 위해 실내로 자리를 옮겨서도 경실련의 대화는 새벽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는 모두 순천만을 둘러보며 맑은 공기와 좋은 풍경에 잠시 고단함을 잊는 그야말로 힐링의 시간까지!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경실련은 순천에서 또다시 새롭게 도약할 열정을 품었습니다. 

자리다툼으로 얼룩진 광명시의회 오명의 역사

정당정치도 그 무엇도 아닌 그냥 예산낭비 사례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국장



▲ 제 7대 광명시의회는 의원들의 몸싸움과 의장석 쟁탈전 등으로 결국 파행으로 치닫고 말았다.

정치인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낭비를 감시해야 하는 시의원들이 오히려 시민의 혈세를 티 안내고 손쉽게 낭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마도 일 안하고 월급 받는 것 아닐까 한다. 이런 예산낭비는 무릇 시의원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라면 모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예산승인 권한을 시민 또는 국민으로부터 이양 받은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

이 그런다면 누가 예산낭비 감시를 해야 하는지 답답해진다.

그 답답한 상황이 광명지역에서 지난 7월, 8월에 발생하였다.

시의원이 된 이유는 시민들을 위해? 아니면 의장하려고?

광명시민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광명시의원 총13명 중 8명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게(나머

지 5명은 새누리당) 표를 주었다. 당선된 13명의 후보들은 6.4지방선거 때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한 표를 호소했던 제7대 광명시의원들이다. 그러나 제7대 광명시의회가 열리는 첫날(7월 7일) 10시에 광명시의회는 의결정족수(13명 중 7명 이상)가 채워지지 않아 개회를 하지 못했다. 이유는 8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의장 후보단일화를 하지 못해 본회의장 출석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4선이었던 나상성 의원과 재선의 젊은 여성인 조화영 의원이 의장 후보였다. 다수의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이 4선이었던 나상성 의원을 지지했음에도 조화영 의원은 후보 사퇴를 하지 않고 같은 당 비례대표인 이길숙 의원과 함께 본회의장에 출석했다. 그 날 본회의에 새누리당 의원 5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명이 출석해 의결정족수를 맞췄고, 새누리당 의원 5명의 지지를 얻어 조화영 의원이 반쪽짜리 의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나상성 의원 외 5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의장선출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의회 출석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결국 제7대 광명시의회의 첫 의사일정은 제대로 개최 한 번 못하고 기나긴 의장쟁탈전 서막으로 치달았다.

그 이후 지난 7월11일에 나상성 외 5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조화영 의원과 이길숙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라고 중앙당에 요구를 했다. 이에 비례대표인 이길숙 의원은 나상성 의원과 뜻(?)을 같이했고, 의결정족수 7명을 채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7월23일 조화영 의원 의장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불복한 조화영 의원은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같은 달 25일 법원에 제출해 광명시의회를 법정공방의 소용

돌이 속으로 몰고 갔다. 불신임안을 가결시킨 7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3일 후에 새누리당 5명과 조화영 의원이 불참한 의장보궐선거에서 나상성 의원을 새로운 의장으로 당선시켰다.

결국 제7대 광명시의회는 초반부터 반쪽짜리 의회, 반쪽짜리 의장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광명시의원들은 7월 한 달 동안 의장 자리다툼에 열을 올리면서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본인들의 월급을 모두 챙겨갔다. 이런 광명시의원들의 자리다툼을 보며 그들이 과연 시민을 위한 시의원이 되고자 했었는지 의심스럽게 만든다.

정당정치는 공천만 받으면 끝인가? 정당공천은 필요한가?

광명경실련은 7월17일 '광명시의회 파행의 중심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조속히 이번 사태를 해결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고, 당일 광명시의회 정상화 촉구를 위한 피켓시위를 의장실 입구에서 진행했다. 광명경실련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저 멀리 떠나보내고 본인들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불통의 시의원들에게 2번의 성명서와 1번의 논평을 통해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광명시의회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광명경실련은 일을 해야 할 시의원들이 내홍으로 인한 자리다툼을 지속하는 모습에서 정당정치의 본질이 무너지는 것을 실감했다. 정당공천을 받은 시의원들이라면 시민들을 위해 당 대 당으로 정책적 대결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같은 당에서 의장하나 제대로 뽑지 못하는 불통의 사례를 보면서 시

광명경실련

2014년 9월 10일



▲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7월 17일에 진행했다.

의장을 의장석에서 무력으로 끌어내리는 광명시의회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 그 날 임시의장을 맡았던 이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결국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다. 이렇듯 광명시의회의 7월은 의장 자리다툼으로 얼룩진 파행의 세월이 됐다.

대화와 타협이 필요 없는 단순한 쪽수 정치

의회에 정당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당공천은 다만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번호로 식별할 수 있는 정당번호를 받기 위한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6.4지방선거에서 광명시의원들은 정당공천을 받고 정당번호를 앞세워 선거운동을 했고, 광명시민들도 선거에서 후보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후보가 속한 정당에 대한 지지를 투표라는 형식을 빌려 표현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광명시의원들은 같은 당 의원끼리 자리다툼이나 하는 한심한 행태를 보여 왔으며, 광명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다를 바 없는 불통의 행태를 자행했다.

지난 7월28일 의장보궐선거 때 새누리당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의를 새정치민주연합과 못했다는 이유로 의장보궐선거 진행을 방해하고, 심지어 회의를 진행하는 같은 당 임시

광명시의회는 7월 한 달여간의 파행 끝에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회 구성을 끝냈지만 그 과정 속에 대화와 타협은 없었다. 상임위원회 구성을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안대로 자치행정위원회 5인(새정치민주연합 3인, 새누리당 2인), 복지건설위원회 7인(새정치민주연합 4인, 새누리당3인)으로 배정함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은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처음 제시한 6:6 상임위원회 구성이 무산되자 7월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화영 의원이 제기한 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모든 의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혀 광명시의회가 긴급하게 소집된 임시회마저 ‘반쪽짜리 의회’로 지속될 가능성을 암시했다. 아니나 다를까. 우여곡절 끝에 열린 8월의 제198회 임시회에서 광명시의회는 새누리당 5명과 조화영 의원이 불출석함으로써 반쪽짜리 의회로 전락했다.

새누리당 5명과 조화영 의원이 빠진 8월의 반쪽짜리 임시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7명의 의원이 일사천리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8월 임시회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35건의 안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된 안건은 하나도 없었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도 약 311억 중 1억만이 삭감됐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 광명경실련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7명의 시의원들이 의원 본연의 역할인 시정견제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심의를 철저히 하게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같은 당 소속 광명시장에 대한 거수기 역할을 하지는 않았는지 염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8월의 광명시의회는 7월 자리다툼으로 인한 영향인지 심의를 위해 준비된 의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인재육성재단의 청소년시설 통합관리, 행정조직개편, 311억의 3회 추경 등 중요한 사안이 많았음에도 쪽수만 충족되면 진행되는 비정상적인 시의회였다. 광명경실련은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8월 광명시의회 결과가 서서히 광명시민들의 피해로 전가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경고의 논평을 발표했다.

예산낭비를 감시해야 하는 시의원들이 일 안하고 월급 챙긴 것도 모자라, 본인들 싸움비용까지 시민들에게 내달라고?

모두에서 밝혔듯이 광명시의원들은 7, 8월에 일을 제대로 안 하면서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월급을 챙겼다. 월급이 티 안 나는 예산낭비라면 광명시의회가 8월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소송비용(착수금) 7백만원을 상정해 통과시킨 것은 예산낭비를 대놓고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송비용(착수금) 7백만원은 조화영 의원이 법원에 신청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른 법적대응 경비로써 광명시의회가 대화와 타협이 살아 있는 의회였더라면 안 써도 되는 시민의 혈세인 것이다. 한마디로 예산감시의 역할을 해야 할 시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오히려 예산낭비를 자행하는 웃기는 모습이다. 이번 의장단 자리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소송비용은 더 증가할 것이고 시민의 혈세는 더 낭비될 것이다.

대화와 타협이 살아있는 광명시의회로 거듭나 광명시민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길

아직도 광명시의회는 정상화되지 않았다. 조화영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파국으로 치닫는 광명시의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광명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협의회와 광명원로회는 광명시의회 스스로가 의장자리 다툼으로 인한 법정공방이 시작되기 전에 화합의 정치로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광명시민에게 지난 7,8월은 광명시의회의 자리다툼으로 파행이 지속된 수치스러운 두 달이었다. 광명경실련은 많은 임기가 남은 제7대 광명시의회가 정당정치도 그 무엇도 아닌 채로 예산낭비를 반복하는 시의회가 되지 않기 바라며, 대화와 타협이 살아있는 광명시의회로 거듭나 광명시민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길 기대한다. **경**

광명경실련

2014년 9. 10일



연구단지 운동장에 경찰서 이전, 침묵하는 지방권력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구미경찰서 이전 논란은 작년 9월 부지매입비를 뺀 예산 248억 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촉발됐다. 1983년 시청 옆 요지에 준공돼 31년이 지나 사무실이 비좁고 주차난이 심해 청사 신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었다. 문제는 금오공대·구미시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운동장 무상사용을 추진함으로써, 구미경찰서에 대한 지역 사회의 불신을 스스로 증폭시킨 점이다. 작년 4월 운동장 소유주인 기

획재정부에 국유재산 사용승인을 몰래 신청한 사실은, 같은 해 9월 금오공대도 사용승인을 신청하면서 탄로가 났다.

구미시는 부지를 매입해 모바일융합기술센터, 3D융합기술센터,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IT의료융합기술센터 등 IT융합기술단지인 금오테크노밸리를 운영하고 있고, 금오공대는 기재부의 사용승인을 받아 경운대, 구미대, 영진전문대와 공동으로 경북산학융합지구(QWL밸리)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개발·학습 캠퍼스의 운동장을 연구원들과 학생들의 지하주차장과 체육·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금오공대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다.

구미시 신평동 옛 국립금오공대 캠퍼스가 3년 전부터 국비 등 4천억 원이 투입돼 IT융복합기술 단지로 변모했다. 10월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입주한다. 지역경제 미래의 대안인 강소기업 육성의 거점이다. 올해부터 지역 4개 대학생 510명의 수업도 시작돼 기존 기업 연구원 등, 1,600여 명이 상주하는 캠퍼스로 복원이 된 셈이다. 남은 부지는 9만여㎡ 가운데 14,743㎡의 운동장뿐이다. 이 같은 엄연한 연구·개발·학습 캠퍼스의 하나 뿐인 운동장에 연관성이 전혀 없는 '구미경찰서 이전'이라는, 유례가 없는 황당한 일이 구체화되면서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권력기관이 지역경제를 발목 잡는 꼴이 났음에도 시장, 국회의원 등은 물론 지방의회조차 침묵하고 있다.

금오공대는 작년 10월부터 구미시에 대체부지 마련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구미경실련은 활용도가 낮은 송정공원과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여유 공간 등 구체적인 대체부지와 원탁회의를 제안하면서, '경찰서를 시유지와 교환해 시민문화복지센터로 활용하자'는 대안운동을 전개했다. 2003년에 준공한 대구시 2·28기념중앙공원 사례도 소개하고, 아산시를 방문해 확인한 아산경찰서 이전 사례도 소개했다. 전자는 시교육청과 구청의 매각과 용도변경 방침을 반대한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도심의 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공원화한 사례이고, 후자는 도심의 아산경찰서를 외곽의 시민운동장 옆 시유지와 교환해 아산시민문화복지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이다. 이처럼 설득력 있는 대체부지 제안과 사례를 공론화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면서 이슈를 성과적으로 확장했다. 그 결과 작년 10월 구미시가 시장·금오공대총장·지역구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기관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고, 운동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측은 "연구·개발·학습 캠퍼스와 경찰서의 조합은 그림이 안 맞다."는 압도적 여론에 밀려 같은 신평동의 사유지인 양지공원 뒷동산으로 방향을 바꿨다. 실제 금오공대 총동창회로부터 올 1월 신년회에서 구미경실련이 감사패를 받는 등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8월 지역구 모 국회의원이 기재부에 개입하면서 경찰서 쪽으로 사용승인이 압박했다는 정보를 금오공대로부터 전달받은 구미경실련은, 국유지와 사유지가 많은 시민운동장 뒷산을 새로운 대체부지로 제안하면서 약속 불이행 등으로 문제해결의 고리를 쥐고 있는 시장을

압박했다. 이 문제 해결은 구미시가 사유지를 매입해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오공대 교수회와 총학생회는 시청 정문에서 매일 출근시간 일인시위와 집회를 열었으며, 구미경실련도 연대 일인시위를 벌여나갔다. 추석 이후엔 지역경제단체 동참 조직, 토론회 등으로 확대키로 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자 기재부는 지난 9월 5일, 추석연휴 전날 경찰 측에 사용승인을 통보하는 '국회 날치기' 수법으로 대응했다. 구미경실련은 추석연휴 직후 '양지공원 뒷동산을 매입해 운동장(사용승인 경찰서 신축부지)과 교환하라'는 대안을 내는 한편, 차기 총선이 1년 반 앞서어서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의 개입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했다. 기재부의 사용승인 결정에도 속지지 않고 구미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단체 기자회견으로 반발여론이 확대되면서 지역구 두 국회의원이 구미경실련 제안 쪽으로 문제해결에 나섰고, 시장도 동조하면서 금오공대가 다시 힘을 모으고 있다. 주민 설득이 남은 고비인데, 구미경실련은 주민설득용 시민여론조사를 국내 최고 권위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할 것을 금오공대에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마지막 난관을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을 개입시켜 돌파하자는 방법이다.

여론에 밀려 뒤늦게 문제해결에 나섰지만, 시민사회의 감시와 검증이 다양화된 대도시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국가 권력기관의 횡포 앞에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지방권력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라는 점에서, 특정정당이 독주하는 지방중소도시의 민주화와 자치가 멀게만 느껴진다. **경V**

지역이야기

2014년 9월 10일



대구지역 섬유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현실과 과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시험·평가·장비 및 상담·교육지원,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시험연구시설·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등의 사업과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업종별, 기능별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연구소이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자, 대학, 공공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기업·민간단체 등이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자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다.

한국섬유산업개발연구원, 다이텍연구원(염색),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소 등 대구·경북지역의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은 중앙정부의 출연금과 사업비, 지방정부의 보조금 등 정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민법상의 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공적 통제장치가 미비한데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등 감독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사장 등 일부 임원 등에 의한 사유화 현상이 심화되고 채용, 입찰, 용역 비리등 각종 비리가 빈발하고 있다.

이 또한 대부분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유화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감독기관의 방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의 하나가 원장 선임 방식이다. 전국의 14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원장은 모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원장을 선임할 때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모두 10곳이다. 그런데 한국광기술원처럼 위원 전체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이 맡고 있는 당연직 이사와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만 구성하도록 하여 이사장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주는 곳도 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 대구지역 소재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이사장과 당연직 이사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국실크연구원(경남 진주 소재)이 이에 해당된다. 더구나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이사장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이사장이 추천하는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만 구성되는 원장추천위원회에서도 이사장을 견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당연직 이사의 숫자가 적은 편이 아니고(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한국패션

산업연구원의 경우 8명 중 3명이 공무원, 한국실크연구원은 당연직 이사 6명 중 3명이 공무원), 숫자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예산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을 빌미로 공무원이 상전노릇을 하고, 이것이 채용비리 등 비리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정부의 간부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들은 원장 선임뿐만 아니라 기관의 운영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 공무원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원장 중 공무원 출신이 6명, 정치인 출신이 2명이나 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전직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사례도 적지 않고, 심지어 현직 간부공무원 자녀를 부당 채용한 사례도 있었다.

대구지역 소재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과 진주의 한국실크연구원의 원장 선임 방식은 이사회 구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을 제외한 10곳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이사 중 해당 업계 업체 관계자 비중은 평균 39%인데 비해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70%,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68.4%, 다이텍연구원은 59%에 달한다. 이러한 이사회 구성은 15명의 이사를 상임이사(원장) 1명, 업계 3명, 유관단체 3명, 학계 3명, 회계법인 1명, 언론인 1명, 시의원 1명 등으로 구성한 한국광기술원과 대비되는 것이다. 또한 이사의 수도 다른 10곳이 평균 15명인데 비해 다이텍연구원은 22명, 한국섬유개발연구원 20명, 한국패션산업연구원과 한국실크연구원은 각각 19명에

이른다. 그런데도 해당업체 업체 관련자 비중은 훨씬 높다.

지방정부의 과도한 간섭 또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대구지역의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은 재정의 대부분을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사업비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사실상 공무원이 예산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이 예산지원 등을 빌미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운영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곧 낙하산 인사와 부당한 지시 등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비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공무원의 개입은 담당 공무원이 새로 부임한 원장에게 인사문제를 본연과 의논하라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로 노골적이고 광범위하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지역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이 이른바 밀라노프로젝트의 추진주체가 된 이후 이들 기관의 개혁은 대구지역 시민운동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다. 그래서 폭로, 감사청구, 고발 등 비리에 대한 대응은 물론 공공기관 지정, 기관통폐합 또는 통합이사회 구성 등의 제도 개선과 감독기관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대구시 등을 상대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관련 정보 공개운동도 벌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크게 개선된 것은 없다. 다만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에 대한 언론 등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대구시가 감사를 하게 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경**

대구경실련

2014년 9월 10일



新조계지와 카지노

조현근
인천경실련 문화관광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8월 11일)' 후 발표된 유망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제시 한 '카지노복합리조트'에 대해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정부 대책 발표이후 주요 자치단체에서 카지노 허용논란이 뜨겁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북항재개발 지역에 '세미 오픈카지노'를 유치하겠다고며 샌즈그룹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샌즈그룹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글쎄"라는 반응이다. 원희룡 제주도시사는 선거당시와 마찬가지로 카지노 추가허용 반대 입장을 보여 당과 어색해진 가운데 되려 '감독기구' 제도화를 역설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경제침체 시기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개발, 재정위기 해소 대책으로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유치를 들고 나왔다. 인천시는 리포&시저스(LOCZ)가 사전심사를 받은 미단시티 외에 추가로 2~3곳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규모 복합리조트가 성사될 경우 직접고용만 5만명 이상이 기대되고 오는 2018년 3곳의 복합리조트가 모두 문을 열 때는 관광수입이 약 3조원 이상, 매출이 본격화되는 오는 2024년 이후에는 연간 3~4천억원대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장미빛 미래를 알리고 있다. 인천시 재정난·경제난을 해결하

겠다면 경제부시장을 자처한 배국환 정무부시장은 한발 나아가 자신의 인사 간담회 자리에서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일명 Open Casino)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비록 '사견(私見)'이라고 진화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현재 정부는 '사행사업통합감독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비중을 OECD 국가들의 평균 등을 고려하여 0.58% 수준에서 총량제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포르투갈, 오스트레일리아, 그리스에 이어 세계 5위(2012년 기준, 게이밍머신 제외)의 사행산업 선진국(?)이다. 이어 미국, 영국, 뉴질랜드, 스페인 등이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19위이다. 한편 정부는 카지노, 경마, 복권 등 매년 사행산업으로 걷어 들이는 조세 수입은 2조2,734억원(2013년)이다.

'카지노 자본주의'란 말이 있다. "국가들이 경제활성화와 재정수입 확대를 내걸며 사행산업을 키우는 추세"를 일컫는 말이다. 인천은 '외자유치'와 '재정위기 극복'이란 명분으로 카지노복합리조트 추진의 속도를 내고 있다. 그 첨병의 역할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있다. 근대 개항지로 서구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던 인천의 역사문화적 고찰을 통해 '외국자본의 불편한 진실'과 강원도, 제주도의 사례를 통해 '카지노의 재정 및 경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역사문화 관점에서 바라본 경제자유구역

잃어버린 기억, 제물포 조계지(租界地)

'동양의 신은 역사'라는 말처럼 지금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130여년 전 근대 개항지로 오늘날의 국제도시라 할 수 있는 제물포조계지¹⁾는 오늘날의 인천경제자유구역²⁾처럼 당시 첨단 선진문명으로 조성되었다. 우리나라는 IMF구제금융(1997년)을 계기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 등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1998년)하였고 칠레, 미국 등 세계 각국과의 FTA를 거쳐 점점 외국자본의 개방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그림1>에서 보듯이 新조계지로 불리만큼 당시 제물포조계지의 기본골격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월미도는 대한제국 시기 일본해군 기지



▲ <그림1> 제물포조계지와 인천경제자유구역 비교

와 러시아 석탄창고 등을 두고 치열한 세력다툼이 있었던 요충지였다. 1900년 송정섭은 조선정부로부터 월미도의 개간권을 허가 받아 일본인 요시가와에게 매각하였다. 요시가와가 월미도 주민을 강제로 쫓아내자 조선 정부는 송정섭을 체포하고 일본 공사관에게 매각 대금을 전달했다. 이에 요시가와는 불응하고 급기야 일본군을 동원해 1905년 민가 80여 호를 강제로 철거하고 섬 전체를 점거하였다. 1923년에는 1km의 제방을 쌓아 육지의 제물포조계지를 연결하였다. 제물포조계지와 월미도는 <그림2>에서 보듯이 조탕, 별장, 요정, 해수욕장, 구락부, 호텔 등 다양한 레저관광시설이 대형화·복합화·집적화한 당시의 첨단도시였다.

돈 바람... 인천미두취인소(仁川米豆取引所) 전국 각처 설립 신청 쇄도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에 따르면³⁾ 일본은 선



▲ <그림2> 제물포조계지와 월미도유원지 시설

1) 제물포조계지 : 제물포개항(1883년)으로 인해 조성된 열강들의 거주지로 외국인이 자유로이 통상하고 거주하며,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오늘날의 국제자유도시라 할 수 있음.

2) 인천경제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3년)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국내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송도, 청라, 영종도)



진 경영을 적용하여 조선에서 자본을 모을 수 있는 유인시설을 만들었다. 일본상인에 의해 설립(1896년)된 우리나라 최초의 '인천미두취인소'이다. 한일무역을 진보 시킨다는 미명아래 투기 도박으로 그 폐해가 컸던 '인천미두취인소'는 오늘날의 '카지노'라 할 수 있을 만큼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의 각축장으로 주변에는 요릿집, 주점, 여관, 유곽 등의 향락산업이 번창했다.

당시 "땅문서는 동양척식회사로 들어가고 현금은 인천에 떨어진다"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전자는 토지조사사업 등에 의한 일본의 토지수탈을 의미하고 후자는 인천미두취인소의 투기거래를 통해 한국인이 자본을 날리던 상황을 의미했다.

이렇게 피해가 확산되자 당시의 「개벽」에 실린 표현처럼 '인천아 너는 어떤 도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미두취인소를 '피를 빨아먹는 악마 굴이요, 독소'라 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일합병(1910년) 후에는 인천미두취인소가 널리 알려지면서 전국 각처에서 돈 바람이 불고 미두취인소의 설립 신청이 쇄도하기도 했다. 1920년대 들어서는 인천미두취인소의 서울 이전 문제가 지역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예나 지금이나 돈이 되는 것은 중앙이 갖나 보다. '인천미두취인소'도 결국 조선총독부에 의해 서울의 '경성주식현물거래소'에 운영권을 빼앗겼고 인천의 패배로 끝이 났다.

그대로 그렇게... 변하지 않는 외국자본의 힘

근대 인천에도 자본취득을 위한 오늘날의 특

수목적법인(SPC)과 국가보다 강한 외국자본이 있었다. 1919년 3월에 창설된 '금융조합'은 조합원의 금융난을 완화하고 경제발달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조선 서민의 푼돈마저도 끌어들이려는 술책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청계 조계에 자리 잡고 있던 화상 '동순태'는 조선 정부에 차관을 줄 만큼 규모가 컸던 거상으로 인천 화상의 무역고는 청일전쟁전만 해도 조선정부를 능가 했다.

불균형 그리고 불균형... 그들이 변함없이 주장하는 말

근대 제물포조계지와 오늘날의 新조계지인 송도국제도시는 불균형한 거주환경과 불평등한 경제활동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림3>에서 보듯이 조선인 거주지와 열강들의 조계지 거주환경의 차이는 확연히 구분된다. 신식 건물로 잘 개발된 조계지와 달리 조선인 거주지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그림4>에서 보듯이 오늘날 낙후된 인천의 원도심과 외국인의 정주여건을 위해 잘 조성된 송도신도가 대조를 이룬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불균형의 문제는 식민지 시대에는 계급적 차이로, 현대시대에는 소득 격차로 인한 양극화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외자의 불편한 진실'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나 지금이나 외국 자본은 '우리에게 경제활동의 자유와 평등을 달라!'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도 외국자본은 경제자유



▲ <그림3>조선인 거주지와 열강들의 조계지



▲ <그림4>낙후된 원도심과 송도신도시

구역에서 이러한 혜택을 현지 국민보다 더 누리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은 근대이나 지금이나 정부에게 '외국인처럼, 아니 그 만큼만이라도 우리에게 경제활동의 非자유와 불평등을 없애 달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재정·경제 관점에서 바라본 카지노

강원도의 힘, 강원랜드

강원도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 도모를 위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995년)하였다. 당시 국민적 동의에 의해 탄생한 강원랜드⁴⁾는 2010년 10월 카지노호텔을 개장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국내 카지노 매출(2013년)은 2조6,475억원으로 이중 강원랜드의 매출은 1조2,790억원이다. 강원랜드는 개장 후 2013년 까지 총 12조8,446억원의 매출(카지노분야 96%, 非카지노분야 4%)을 올렸다. 특히 카지노를 제외한 非카지노 사업분야의 매출은 매년 적자(2012년 기준 178억원)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강원랜드의 기금현황⁵⁾(1998~2013년)은 2조2,363억원으로 매년 2,418억원(2013년)에 달한다. 이중 조세(국세, 지방세)와 기금(관광기금, 폐광기금), 주주 배당액 등을 모두 합하면 총 5조9,852억원(매출의 46.6%)으로 나타났다⁶⁾. 주주 배당액을 제외한 순수 조세와 기금의 총수입은 총 4조3,680억원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비율은 71.4%와 28.6%이다. 기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조세수입은 2조1,317억원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9.6%, 10.4%에 지나지 않다.

지식경제위원회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2011.12)에 따르면, 폐광법에 의해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투입된 재원(1996~2010년)만 하더라도 폐광지역진흥지구

4) 강원랜드 : 1998년 6월 설립. 카지노분야와 호텔, 리조트, 골프 등 非카지노 분야로 운영되며 2013년 현재 공공부문 주주 51.01%, 외국인 28.01%, 국내기관 10.77%, 기타 4.97%, 자사주 5.24%임

5) 강원랜드 기금 : 관광진흥개발기금(매출액의 10%), 폐광지역개발기금(당기순이익의 25%)

6) 배당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강원랜드 사업보고서 배당비율에서 추정, 국세 및 기금은 사행사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서 발췌

3) 근대문화로 보는 한국 최초 인천 최고(인천시역사자료관)에서 요약 발췌



개발사업, 탄광지역 개발사업, 대체산업창업 지원용자, 강원랜드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4개분야 7조 8,59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강원도의 지역경제효과는 2001년 이후 2003년까지는 강원도 폐광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성장률이 전국 GDP 성장률을 상회하였으나 2004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2006년 이후에도 전국 성장률을 하회했다.

당초 강원랜드의 폐특법은 한시적으로 2005년까지였으나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2015년과 2025년으로 각각 연장되었다. 강원도는 2012년에도 법률개정안을 통해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고 관광기금도 현행 10%에서 5%로 하향을 요구하였으나, 최종 폐광기금은 25%로 관광기금은 10%를 유지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왕서방과 들하르방... 외국인 카지노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많은 제주의 경우도 중국자본에 의한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으로 인한 토지 잠식, 세금감면 후 먹튀 등 부작용이 속속 나오고 있다.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시작되고 대규모 중국자본의 투자가 잇따르면서 자본유입으로 경제지표는 개선됐지만 카지노 개장, 경관 훼손, 중국인의 대규모 땅 매입 등으로 논란에 서 있다.

중국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이호해수욕장 전체 면적이 사업부지에 포함되고, 세제혜택을 본 땅을 제3의 중국업체에 팔아넘긴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국내사업자와 공동사업을 내세워 기

존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투자진흥지구 신청은 물론 부동산 영주권 혜택까지 각종 특혜를 취한 차이나티디 등 지금 제주도에서는 외국자본과 보이지 않는 총성이 진행되고 있다.

카지노의 빛과 그림자

현재 국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16개소로 제주도가 8개를 보유하고 있다. 조세측면에서도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매출액 1조3,685억원(2013년) 중 조세 및 기금액은 2,550억원(매출의 18.6%)으로 이중 국세와 국가기금이 2,422억원(95%), 지방세가 128억원(5%)을 차지했다. 외국인 카지노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은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카지노의 관광외화수입 효과를 보면, 2013년 기준 국내 총 외래관광객은 12,175,550명으로 14,303백만불(1인당 1,175불)의 수입을 얻었다. 이중 카지노이용객은 2,707,315명(총 외래관광객의 22.2%)으로 1,250백만불(1인당 462불, 전체 관광외화수입의 8.7%)의 수입을 얻었다. 전체 외래관광객 중 카지노 방문객(22.2%) 대비 1인당 카지노 외화수입액(8.7%) 비율이 현저히 낮으며, 이는 카지노보다 더 큰 부가가치 시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고용유발효과 측면에서도 현대경제연구원의 '카지노 자본주의 폐해' 보고서(2006년)에 따르면, 사행산업의 취업 유발효과는 연간 약 204,000명이며 유발실업자 수는 약 213,000명에 달한다. 순실업자가 9,000여명 늘어난 셈이다.

경희대 산학협력단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중

합계획' 보고서(1012년)에 따르면, 강원랜드 카지노의 회원영업장 매출은 감소하였으나 일반영업장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대학생 등 리조트 휴식을 취하러 왔다 카지노에 단순 방문 이후 사행산업에 진입한 사례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도한 몰입으로 이용객이 재산을 탕진하고 불법 사채까지 이용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인근지역 노숙자 및 자살자 증가, 가정파괴, 카지노 앵벌이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한다.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보고서(2010년)에서도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비용은 약 78조원(1인당 26,310,000원, 유병률 6.1% 기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구는 정체되어 있으나 도박중독으로 인한 비용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향후 사회적으로 도박중독 문제로 인하여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사행산업사업자로 하여금 순매출의 0.5% 이하에서만 부담시키고 있다.

3. '오래된 미래, 다가올 과거'를 위한 우리의 선택

제물포조계지와 강원랜드, 제주도를 통해 외국자본의 불편한 진실과 카지노 자본이 가진 의도와 경향을 알 수 있었다. 경제활동의 자유와 평등 측면에서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든 민간이든 손쉽게 돈을 벌수 있는 카지노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동력인지 의심스럽다.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시장과 경쟁을 해야 하는 '개방'의 현실을 인정하고, '개성'있는 산업을 창조하여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에 놓여 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하기 어렵지만 해야 할 것'이 있다.

〈그림5〉은 선구지 인천의 근대 풍경(2013년)에 실린 사진이다. 1871년 5월 30일 기항 콜로라도 호에 대표로 승선한 조선인 관리 한명이 맥주 등을 대접받았던 후 찍은 기념사진이다. 만족한 듯이 미소 짓고 있는 관리의 상투와 긴 담뱃대가 서구문명의 상징인 맥주병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



▲ 〈그림5〉 맥주병을 안고 있는 조선인 관리

당시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어떤 심정으로 조선인을 바라보았을까?

먼 훗날 우리의 선택이 후손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지 생각하게 하는 사진이다. **경**

마음 아픈 곳 없이 괜찮은가요?

최예지 경제정책팀 간사
cyj@ccej.or.kr

훈훈한 비주얼을 자랑한 SBS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가 종영됐다. 단순 멜로 드라마인 줄만 알았는데 시청자가 힐링이 되는 드라마였다.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의 직업인 정신과 의사를 활용한 상담치료 사례와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시청자도 함께 치유될 수 있는 드라마였다. 우리는 종이에 손이 베거나 넘어져 상처가 생기면 바로 연고를 바른다.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면 바로 약을 찾아 먹는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느끼는 상처에는 호들갑을 떠다. 하지만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떨까? 술을 마시거나 혼자 속으로 삭히거나 외면해 버린다. 이런 방법으로는 마음의 상처가 낫질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간다. 우리는 혼자만의 방법으로 치유 대신 상처를 가리기에 급급하다.



‘괜찮아, 사랑이야’라는 드라마는 이런 현대인 마음의 상처에 대해 질문하고 우리를 치유했다. 물론 연인의 사랑이 주된 내용이며, 드라마 속 내용이 꼭 전문적 치료방법은 아니었지만 드라마 방영 시간만큼은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치유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고 이를 스스로 찾도록 도와줬다. 이 드라마를 통해 주변에 누군가 마음이 아프다면 질타보다는 사랑으로 보듬어야겠다고 결심하게 했고, ‘마음의 상처도 돌봐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안고 있다. 우리는 가벼운 트라우마부터 세월호 참사까지 다양하고 상처의 강도도 다르게 마음에 병이 들어 있으나 본인조차 마음에 병에 대해서는 치유하려 하고 있지 않고 있다. 큰 사고를 겪은 사람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에 관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으며 그것조차도 극소수 사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른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픈 부분을 드러내야 한다. 아픈 부분이 부끄러울 수도, 아니면 꺼내는 것이 더욱 힘들어서 숨길 수도 있다. 하지만 ‘괜찮아, 사랑이야’ 드라마에선 자신의 못난 부분, 숨기고 싶은 부분, 아픈 상처 등을 다 꺼내 이야기하며 치유하고 있다.

남자 주인공인 재열은 16살 때 의붓아버지의 폭력에 의한 상처, 그리고 의붓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엄마지만 그걸 숨기고 형에게 누명을 씌울 수밖에 없는 현실, 고통스럽지만 이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고 자신이 받은 상처를 외면하다 결국 환시개 보이는 정신분열 형국까지 치닫게 된다. 여자 주인공인 해수는 어릴 적 엄마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키스

조차 식은땀을 흘려가며 억지로 해내간다.

치유될 수 없을 것만 같던 그들의 상처는 서로를 사랑하면서 점점 자신들의 상처를 밖으로 드러냈고 둘은 하나씩 치유해나갔다. 그 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들의 상처를 드러내는 모습을 사랑으로 감쌌고, 응원해줬다. 이 둘뿐 아니라 다른 등장인물들도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상처를 내보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며 상처를 하나씩 치유해나갔다. 시청자들도 이런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껏 아파해도 괜찮다고.. 그리고 그 상처가 사랑으로 치유되는 모습에 공감했을 것이다.

드라마 속에서 등장인물 모두 주변의 사랑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 갈등을 풀고 화해하며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우리는 이제 현실로 돌아왔다. 공감보다는 지적과 비판, 비난이 난무하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는 마음속 상처를 꺼내야 할 시간이다.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꺼내어 보듬어줘야 한다. 그리고 비난과 잠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어깨를 토닥여 줄 시간이 왔다.

마지막 회에 남자 주인공이 라디오 게스트로 나온 장면이 이렇게 작별 인사를 했다. “오늘 굿나잇 인사는 여러분이 아닌 제 자신에게 하고 싶네요. 저는 남에게는 괜찮으나, 안부도 묻고 잘 자라는 굿나잇 인사를 수도 없이 했지만 정작 제 자신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너 정말 괜찮으나 안부를 물어보고 따뜻한 굿나잇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도 굿나잇 장재열”

이제 우리도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스스로에게라도 괜찮냐고 물으며 굿나잇 인사를 해보자. 그리고 그 아픔이 세상의 모든 사랑으로 치유되길 바라본다. **경**



바람 부는 가을엔 사랑이다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 존 그린, 북폴리오

박지호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jhpark@ccej.or.kr

가을엔 소설이든 시이든 종이 가득한 활자들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흡수된다. 오랜만에 사랑의 감정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고자 전 세계를 휩쓴 연애소설을 집어 들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10대들의...

존 그린의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 속 두 주인공은 죽어가고 있다. '헤이즐 그레이스 랭커스터'는 말기 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시험약품이 기적적으로

몸에 맞아 생명이 연장되어 살아가고 있다. 코에 호스를 달고 산소공급기를 늘 동반한 채로 말이다. 그러던 중 암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경쟁하는 서포트 그룹에서 '어거스터스 워터스'를 만나게 된다. 그는 골육종에 걸려 한 쪽 다리를 잃은 후 의족을 차고 다닌다. 이렇게 조금 불편한(?) 생활 속에서 죽음이 누구보다 가까이하고 살고 있는 이 10대들은 그 누구보다 태연하고 의연하고 담담하다. 헤이즐과 어거스터스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시간의 총량이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허겁지겁 경험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풋내나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이 책은 암에 걸린 주인공들이 배치되어 있지만 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감정의 형성, 교감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져 추억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이다. 물론 영화를 먼저 접한 후 책을 읽게 되어 그 감동과 슬픔의 느낌이 온전히 느껴지진 않았지만, 이들이 나누는 대화와 새겨나간 시간들은 어딘가 숨겨져 있는 '마음'이란 것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총량을 알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매시간 속에서 감정에 솔직하고 남에 대해 이해하는 노력을 하며 살고 있지 않다. 우린 참 아름답지 못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시간의 총량은 우리가 '모르는 것'일 뿐 '무한대'는 아니다. 한정되어 있는 시간 속에 무한대의 영원함을 느끼는 것은 무한대로 치닫는 사랑의 모순에 빠지는 것뿐이다. 헤이즐과 어거스터스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들의 시간은 지독하리만치 짧다. 누구의 말마따라 우물쭈물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될 줄 알았어'라고 후회만 하고 말 것이다. 이 책에 대한 지인들과의 토론 속에서 난 매우 냉소적으로 다시는 이들과 같은 순수한 사랑이 불가능한 시간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심 이들의 모습이 그립고 부러웠다.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선택할 수는 없지만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을지는 고를 수 있다." 나에게 상처를 줄 사람을 고르지 못한 모습이 슬프다. 사랑의 계절인 가을에도 그 상처에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한 내 모습이 아프다. **경**



'좋은 집',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인식되길...
〈어디 사세요〉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사계절

소지윤 부동산감시팀 인턴

'집'이란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가장 이상적인 이미지는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거실태를 살펴보면 현실은 정반대다. 너무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20%는 정착하지 못하고 매년 이사를 다니고 있다. 그 말은 내 집 마련은 소득수준과 연결 되며, 집을 사기 힘든 저소득층은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고 가난을 대물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과도 같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펴보면,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으로 묶여 있을 정도로 부동산과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집값 하락 문제는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삶의 형태가 주거 영향에 따라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알고도 토건 세력과 결합해 매매되지 않고 있는 아파트들이 넘쳐 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에서 내세우는 부동산 가격은 유지하고, 세금 감면을 통해 집값 하락을 막는 요구를 수용하는 등 방치하고 있다. 어디를 봐도, 국민들을 위한 주거 정책은 살펴보기 힘들고, 주거 공간 마련은 삶의 무거움이라는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됐다.

이 책에서는 다른 선진국들의 주거실상을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민들이 공청회에 직접 참여해 주거정책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이의 목적은 '주민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주민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라고 할 만큼 독일의 주민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의 경우 정원이나 서고를 개방하고, 노인 주택에 청년 세입자가 함께 사는 실험을 행하고 있다. 한창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며 논란을 가져오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도시 경관을 보호하며 주민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개발을 진행하려는 노력도 주선해오고 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어디 사세요?' 라는 질문은 사는 지역이 곧 경제력을 반영하는 만큼 불편하게 다가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좋은 집'은 부유한 동네 혹은 소수 상위계층을 위한 한정된 일반 서민들로부터 접근이 어려운 공간이라는 인식을 완전히 벗어나, 앞으로 우리 모두가 주어진 땅에서 주거를 마련하고 증가하는 국민소득만큼 동시에 행복지수도 올라가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인식되기를 바란다. **경**

Post-2015 HLP 개발어젠더와 건강: 보건인력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변유진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석사과정
정혜주 경실련 국제위원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2012년 6월, 리우회의 20주년을 맞아 열린 리우+20,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계기로 2015년 종료되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후의 체제의 방향을 잡게 되었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수립이 추진된 바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Post-2015 체제의 핵심 원칙으로 대두되었고, 이를 위한 실행 계획을 논의하고자 Post-2015 고위급패널(HLP: High Level Panel)이 결성됐다.

Post-2015 HLP 개발 어젠다는 MDGs의 정신을 계승하는 동시에 2030년까지 전 지구의 절대빈곤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차례 회의를 가진 HLP는 향후 Post-2015로써 5가지의 최우선 변화과제와 12개의 목표, 그리고 54개의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5개의 최우선 변화과제는 다음과 같다.

1. Leave no one behind(절대빈곤퇴치)
2. Put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core(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점화)
3. Transform economies for jobs and inclusive growth
(일자리 창출과 포괄적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변화)
4. Build peace and effective, open and accountable institutions for all
(평화 및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있는 국가제도 구축)

Post-2015 핵심원칙으로 대두된 '지속가능한 개발'은 보건 의료 분야에서도 꾸준히 강조되고 있는 원칙으로써, 현재 국제사회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보건의료 인적역량 강화 및 제도적 역량 강화이다. 특히 지난 2006년 WHO는 World

Health Report 2006 주제를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위기'로 설정했으며 'Working together for health'라는 제목으로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2008년 Global Health Work Alliance(GHWA)는 Global Forum on Human Resources for Health를 개최해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캄팔라 선언'을 통해 G8 회원국들이 개발도상국가의 보건의료 인력이 WHO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 외에 UN, World Bank, USAID, The working Group on Global Health Partnership for the Health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Global Fund to fight AIDS, TB and Malaria(GFATM)등의 기구는 MDG 달성의 장애요인으로써 일반적인 의료체계의 문제와 더불어 보건의료 인력 문제라고 지적하며, 더욱 보건의료 인력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특히 예방 및 건강증진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보건사업은 타 분야에 비해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에 1달러를 투자할 시 10배에서 최대 30배의 효과를 발생시키고, 그만큼 현지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작업은 빠른 개발성과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드는 동력으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료는 건강한 차세대들을



국가의 원조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사업에 보건의료체계, 관리 및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병행하거나 별도의 이니셔티브를 통한 인적 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보건의료 ODA 대부분을 집행하고 있는 2개의 조직

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에서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 맞추어 특정 질병과 특정 인구집단에 집중되었던 보건의료 ODA 전략적 목표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KOICA의 경우 보건의료 체계강화와 취약계층 및 취약질병의 지원강화를 큰 목표로 삼고 인적, 제도적 강화와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세부 목표로 두었다. 그 중에서도 수원국의 보건의료 정책 인력과 의료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KOFIH는 보건의료 인력 연수와 교육훈련, 컨설팅, 자문 서비스 등의 성격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렇듯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사업은 대부분 한국의 보건의료 전문

성시킨다는 점에서 경제사회 발전의 밑바탕이 된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개발도상국 의료인력 양성에 큰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도상국의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최소인력은 대략 4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선 이러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지교육기관의 능력을 개선시키고, 이들과 협력을 증대하는 노력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선진공여국에서는 수원국 현지의 보건의료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은 직접 사업보다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예산 투자이다. 또한 보건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보건의료분야의 ODA를 좀더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개발되고 있다. 이들은 각



인력을 수원국에 파견하거나, 현지 보건의료 인력을 한국에 초청하는 연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파견은 일년에 2-3인 정도이고, 연수사업 또한 짧은 시기의 적은 수의 초청 인원만을 수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보건의료 ODA 대부분이 하드웨어적 사업인 병원 설립 및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ODA 총 자금의 양 자체가 크지 않고 인적 자원 강화를 위한 역량을 다지기에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선진공여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ODA 전문가 양성 사례들을 한국의 실정에 맞추어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인력 양성을 통한 수원국 현지 인력들의 질 향상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기구, 선진공여국, 시민단체 및 재단 등 다자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수행하는데 있어 작은 가지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더 큰 숲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리**



경실련과 함께했던 8주에 감사하며



임혜수
사회정책팀 인턴

첫 출근 하던 날 땀 뻘뻘 흘리며 겨우 찾아낸 경실련 회관이 참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8주가 지났습니다. 마지막 출근길에 바라본 경실련 회관은 너무 익숙해서 마지막이라는 것이 더 아쉬운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경실련 인턴으로 살았던 올 여름은 그 어느 여름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던 특별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세상 돌아가는 일에 항상 귀 기울이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경실련에서 2달을 보내며 내가 미처 알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실련에서는 거의 모든 분야의 사회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의 업무는 물론이고 다른 팀의 대화를 듣는 것, 기자회견이나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 다른 상근자 분들이나 인턴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이 사회에 대한 고민의 폭을 한층 넓힐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들이 정말 많이 쌓여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한 간접적 습득이 아닌 시민운동이라는 최전선에서 실감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일한 사회정책팀은 크게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분야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일은 자료를 직접 수집하거나 1차 자료들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일이었습니다. 정확한 근거와 합리적 논리가 없이는 주장도 없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데이터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거나 직접 조사해 취합한 다양한 자료들은 경실련 운동의 기초이자 핵심이고 누구나 공감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느낄 수 있는 현상이나 근거를 만들어 줍니다. 의료영리화 대응활동으로 대형병원의 회계자료와 공공병원 직종별 인건비 자료를 비교가 능하게 가공하는 업무를 했고, 대형병원의 대표적 부대수익사업인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고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OECD 보건의료 보고서와 통계자료를 분석한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데이터의 맨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문제가 많다는 것을 생생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기사스크랩이나 보도자료 정리 등을 통해 평소에는 신문에 나오는 정도로만 알고 있던 의료영리화 이슈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핵심 쟁점들의 동향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심 이슈들의 새로운 소식을 꾸준히 정리하는 일도 주요한 업무였습니다.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실습기간 중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었던 자사고 문제 등의 기사 스크랩이나 교육단체 보도자료 정리 등을 하면서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우리나라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위원회와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일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제도와 현장의 모순들을 전문가들에게 직접 듣고, 경실련 운동 과정의 중요한 부분도 경험해볼 수 있었던 의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부서의 업무를 함께하거나 토론회, 기자회견을 참석하는 등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제나 통일 분야의 이슈와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토론회들은 무척 유익했습니다. 인턴 동기들과 경실련에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기획안으로 만들어 인턴 마지막 날 상근자 분들 앞에서 직접 발표하며 인턴생활을 뿌듯하게 마무리한 일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험과 배움을 준 경실련에서 고마운 인연도 많이 만났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경실련의 상근자분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항상 공부하고 고민하는 열정을 배웠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같이 손가락이 빨개지도록 도장도 찍고, 릴레이 인터뷰도 하는 등 매주 만나는 시간 외에도 자주 함께했던 인턴 동기들도 경실련이 만들어 준 소중한 인연입니다. 특히 부족한 저에게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우리 사회정책팀 남은경 팀장님과 정택수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제가 경실련에 적응 하는 데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간사님, 이것저것 물어보면 같이 고민하고 가르쳐주셔서 많이 배우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인턴들만 들어온다면 사회정책팀 인턴의 명맥(?)을 제가 끊어버린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지만 행복했던 8주였습니다. **경**



사람냄새가 나는 월간 경실련을 보고...

황호식
회원홍보팀 인턴

정보의 질적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는 사회에서 찬반이 엇갈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때일수록 합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된 그 분야 전문가의 주장 섞인 글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월간 경실련은 콘텐츠의 질이 훌륭한 잡지입니다. 사안에 대해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주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격월간 잡지임에도 불구하고 칼럼에 적절한 시의성이 있어 편집자의 노고가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한 알지 못했던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조명하는 활동가분들의 열정 섞인 칼럼 역시 월간 경실련의 가치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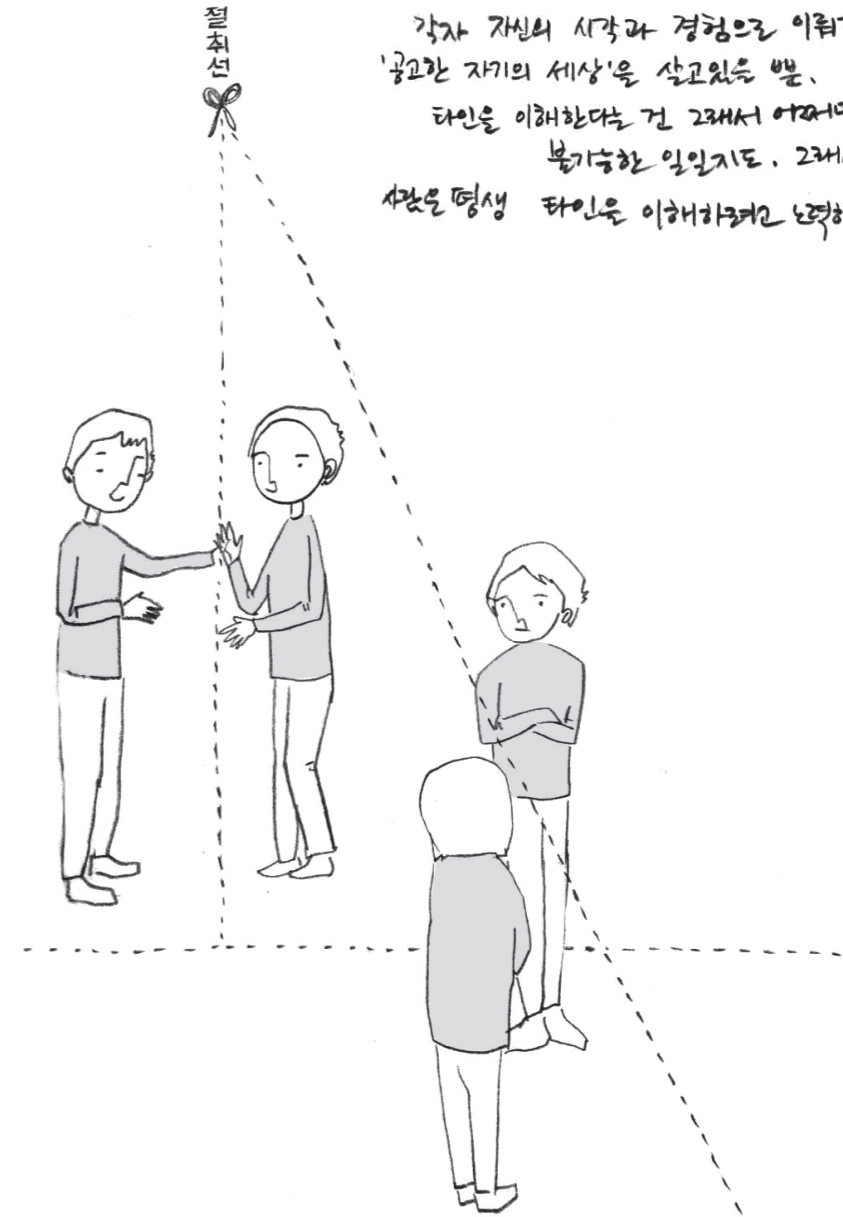
이번호 월간 경실련을 받아보면서 기획특집의 주제가 지난 호와 같아 염려하였으나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연계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획특집과 같이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칼럼이 나오는 장(章)은 시간의 흐름이라든가 인과관계가 드러난 배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7,8월 월간 경실련은 이를 정확하게 충족시켜 읽기 편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사회의 문제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에 명확하지 않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한 쪽 입장에 대해 서술하였다면 다른 쪽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실련의 입장은 이렇지만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입장과 근거들을 제시하여 독자 스스로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면 더 나은 잡지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제목과 핵심내용이 일치하는 칼럼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칼럼이 있어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목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월간경실련에는 사람 냄새가 나는 글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한 글을 읽으며 공감 하는 것도 하나의 소중한 즐거움입니다. 7,8월호의 김보라미 변호사, 어느 50대 회원의 인터뷰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제가 특히 흥미롭게 읽은 기사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잡지를 통해 개개인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 호 더 나은 월간경실련 편집을 위해 고생하시는 상근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백대수님의 '절취선'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살고있지만,
각자 자신의 시각과 경험으로 이뤄진
'공고한 자기 세상'을 살고있는 땀,
타인을 이해한다는 건 그래서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그래서
사람은 평생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한다.



■ '당신은 이미 GMO를 먹고 있습니다' 웹 홍보물을 읽고...

(9.17) @ImCJY76 <트위터>

GMO가 왜 좋지 않은 것인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 GMO가 상업화 된지 20여년이 흘렀지만 안전성 관련해서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9월 프랑스 연구팀에 따르면 GMO옥수수를 쥐에게 일생(2년) 동안 먹었더니 종양과 장 기손상이 보통 쥐보다 많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존재하는 농산물을 외국에서 다량 수입하고 있지만 현행 표시제도의 허술함으로 어떠한 표시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성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소비자의 알권리 등을 침해하는 식품은 "좋은" 상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박지호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jh_justice)

■ '대한민국 검찰은 청와대의 들러리인가' 성명을 읽고

(9.16) @ybh632042 <트위터>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국민이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 사법부는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초유의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를 선고하며 "선거에서 정치에 개입은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는 길이길이 회자될 명언(?)을 남겼죠. 이런 판결로 재판에서 지고도 검찰이 항소를 고심했다니 헛웃음이 납니다. 다행히 이제라도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으니 부디 검찰은 스스로 정권의 들러리도, 대통령의 비서도, 청와대 법무팀도 아닌 대한민국의 검찰이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네요.

유애지 정치입법팀 간사 (@yustina0264)

■ 제품별 GMO 사용여부 관련 업체답변을 읽고

(9.3) 오xx <페이스북>

꼼꼼히 챙겨서 알아보고 먹어야 하는 시대. 특히 GMO...

▶ GMO농산물을 다량 수입하는 CJ제일제당, 사조 등은 이를 통해 수많은 가공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철저하게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표시제도에서 표시 예외대상으로 두고 있는 식용유 등에 GMO를 적극 활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실련은 GMO원료 사용을 기준으로 하는 표시제도 개선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박지호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jh_justice)

■ 시리얼, 팝콘, 스위트콘 제품 GMO표시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읽고

(7.30) @iphotol <트위터>

팝콘 튀기는 기름도 한번 분석해주시죠. 버터향이 나서 버터로 알고 드시는 분들이 많죠.

▶ 수입산 대두와 수입산 옥수수로 제조하는 식용유는 대부분 GMO공과 GMO옥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표시제도에서는 GMO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후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업체들이 적극 활용하여 식용유 등을 제조하는데 GMO농산물을 대거 사용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박지호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jh_justice)

■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보도자료를 읽고

(7.24) @wonhyoyoon <트위터>

동감합니다. kt는 반드시 회장부터 책임자들 전부 처벌해야 됩니다. 정부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부가 돈 받아 먹었나? 세무조사 및 기타 비리조사 해야. 국민들 피 빨아 먹는 악질기업은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 책임자 처벌은 물론 피해 고객들을 위해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는 자신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망각하고 자신들 역시 해커들에 의한 피해자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 역시 유출 자체를 피해로 보지 않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유출로 인한 2, 3차 피해만을 피해로 인식하는 납득하기 힘든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박지호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jh_justice)

신입회원 한마디 "반갑습니다! 회원님"

강신빈 | 바른사회를 위한 활동을 한다는건 알고 있었으나, 직접참여는 처음입니다.

김익수 | 조그만 힘이라도 이나라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인환 | 혼자서는 벽이 너무 높아요.

유병상 | 부산에 도움만 받은거 같은데 어느날 문득 난 무엇으로 보답을 해주어야하나, 앞으로의 부산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바뀌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게 관심을 가져야 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여 평소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직접참여를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곤섭 |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약속, 행동하겠습니다.

이태영 | 깨끗한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정연식 | 정의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못된 공권력있는 경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권 리행사를 실천하여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를 살아 생전에 잘못되는 것을 보기 싫어서 가입했습니다.

조건영 | 경제정의에 대한 희망을 품어 봅니다.

최성수 | 평소 시민운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받습니다. 시는 얘기,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 경실련 운동에 대한 의견, '월간 경실련'을 읽고 느끼신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메일 news@ccej.or.kr | 트위터 @cyberngo | 전송 02-741-8564~5





경실련은 하루하루 시민과 함께 걷습니다



2014. 09

- 09.18 GMO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최경환 부총리의 서민증세 반박에 대한 입장 발표
- 09.17 '당신은 이미 GMO를 먹고 있습니다' 웹 홍보물 발표 ▶ 사진1
'식약처, GMO표시 적정성 점검결과 공개해야' 성명 발표
'기본권적 복지는 국가사무, 복지재정확충 방안 마련하라!' 성명 발표
- 09.16 '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성명 발표
'대한민국 검찰은 청와대의 들러리인가' 성명 발표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발표
- 09.12 '부지중세없는 지방세 인상은 명백한 서민증세' 성명 발표
- 09.0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 발표
- 09.04 '사리사욕 위한 송현동 호텔건립 포기하라' 성명 발표
'제 식구 구하기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뻔뻔한 국회' 성명 발표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프리오픈) 철회하라' 성명 발표
'무능력의 극치, 박근혜 정부의 '삼질경제'로는 경제활성화 불가능하다' 성명 발표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14개 업체 GMO 사용여부 밝혀야' 성명 발표
- 09.03 '제품별 GMO 사용여부 관련 업체 답변' 발표
- 09.01 '2014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운동의 방향' 토론회 ▶ 사진2
'정부 주장 민생법안 평가 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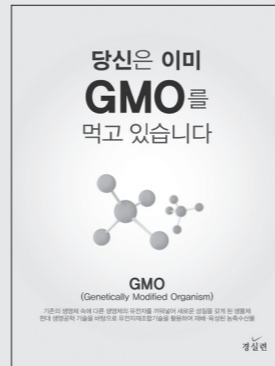


사진1



사진2

2014. 08

- 08.29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및 박근혜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는 전국경실련 공동 거리행진 및 기자회견
한국전력 본사 부지 매각공고에 대한 입장 발표
- 08.27 「WTO와 쌀 완전개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김성훈 대표 열린강연회
- 08.22 ~ 23 제 13기 2차 중앙위원회 ▶ 사진3
- 08.20 석촌대로 싱크홀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발표
'부동산 투기 완결판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성명 발표
- 08.19 '사학비리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은 총장 자격 없다' 성명 발표
- 08.13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방안의 재검토' 토론회 ▶ 사진4
- 08.07 '박근혜 정부의 지구촌 새마을운동에 대한 진단, 평가 및 발전방향' 토론회 ▶ 사진5
201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발표
- 08.04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 문제점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권고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사진3



사진4



사진5

2014. 07

- 07.29 시리얼, 팝콘, 스위트콘 제품 GMO표시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07.25 민간제안 방식 민자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07.24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 07.23 '부동산금융 규제(LTV, DTI)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사진6
- 07.22 송현동 호텔건립 중단촉구 및 학교주변 호텔건립 반대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 ▶ 사진7
'편법을 통한 의료영리화정책 강행을 중단하라!' 성명 발표



사진6



사진7

* 경실련의 모든 성명 및 발표자료는 경실련 홈페이지 (www.ccej.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호균	홍우표	김용재	신혜숙	전동준	화일산기(주)	김재석	서윤기	이익창	최병문
표한홍	홍응표	김정욱	안호춘	전만식	황보원주	김재욱	손종수	이정미	최재용
풍경섭	황경수	김정현	양태식	전성휘	해광스님	김재철	손진찬	이정은	최정식
하재성	황동훈	김중범	윤성중	전양호	강창성	김정혜	안창한	이준희	최태열
한기억	황락훈	김중식	윤준형	전운성	공영서	김중윤	양기정	이지은	최희수
한동훈	황선근	김준수	유영호	전호성	권영준	김준태	양정희	임미진	태평초
한상화	황성주	김평안	유제원	정의성	권오일	김진두	우홍인	임영숙	한상복
한수환	황영미	김한택	윤장혁	정지만	권태석	김진순	유성찬	장병화	허태구
한은례	황희연	김해경	윤재경	정충교	권태훈	김태석	유재준	장성숙	
한인섭		김희성	윤재선	정휘돈	김규만	김태진	윤혜정	장현수	
한정현	춘천경실련	남형우	윤학로	조성모	김동완	김태현	이경식	전극중	
한정현	춘천상공회의소	박도수	이관행	조성자	김동탁	김태희	이국희	전정렬	
허석렬	고태구	박성규	이복연	최충익	김동환	김현실	이규은	전우영	
허성만	권용범	박정근	이상섭	최희수	김문규	김현철	이동철	정은미	
허영	길정숙	박형일	이상철	하상준	김미경	김현표	이동훈	정대문	
허장권	김광배	방명열	이석원	한광수	김상수	김현희	이미아	정혜영	
현상주	김기남	방수미	이승준	한희민	김성희	나창호	이상민	정 휘	
형미희	김남철	변용환	이원규	함태성	김시경	남승국	이상윤	조동욱	
홍강희	김대영	변좌량	이은영	함형주	김수구	박문태	이세환	조송이	
홍성원	김범철	변지용	이인배	황덕호	김용갑	박상조	이수창	조은석	
홍성학	김석중	석영기	이종민	황해숙	김원우	박영태	이영철	조은경	
홍성학	김선배	손현기	임재선		김은정	박임성	이욱재	주해남	
홍승표	김순옥	송창근	전규호	포항경실련	김익태	박정한	이운용	지승익	
홍승표	김승현	신길호	전근우	(주)케이알티	김정수	박태승	이원탁	최동수	

중앙경실련

사무총장	766-5626	고계현
기획·총무팀	741-8566	사무처장 : 윤순철, 부장 : 채준하, 간사 : 오세형
회원·홍보팀	744-0400	간사 : 정지영
경제정책팀	3673-2141	팀장 : 김한기, 간사 : 최예지
정치사법팀	3673-2145	팀장 : 김삼수, 간사 : 유애지
사회정책팀	3673-2142	팀장 : 남은경, 간사 : 정택수
국제팀	766-5623	간사 : 정의정, 간사 : 이현아
부동산감시팀	766-9736	팀장 : 윤철현
국책사업팀	766-5628	부장 : 최승섭

(사)경제정의연구소	766-5625	팀장 : 권오인
(사)경실련통일협회	766-5624	간사 : 홍영근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766-5627	팀장 :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3673-2146	팀장 : 이기웅, 간사 : 권태환
소비자정의센터	765-9732	간사 : 박지호
미디어원지	3673-2143	
월간 경실련	766-5629	이사 : 음유정, 김용재

지역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031-253-2266	
광역시		
광주경실련	062-528-4851	처장 : 김기홍, 부장 : 강경민, 김세현
대구경실련	053-754-2533	처장 : 조광현, 부장 : 최은영
대전경실련	042-254-8060	처장 : 이광진, 협동처장 : 차정민, 국장 : 이현호
부산경실련	051-761-3951	사무처장 대행 : 이훈진
인천경실련	032-423-2950	부장 : 윤정선, 팀장 : 김미라, 배성훈, 간사 : 이주빈
경기·강원권		처장 : 김승현, 국장 : 최해자, 김선희
경기팀	031-253-2266	
광명경실련	02-2614-1224	국장 : 허정호, 부장 : 허창순
군포경실련	031-392-3111	국장 : 오은정
수원경실련	031-253-2266	정책실장 : 노건형, 간사 : 유병욱
안산경실련	031-402-6116	국장 : 김경민, 부장 : 고선영, 간사 : 최윤정
안양·의왕경실련	031-443-6730	처장 : 이성균
김포경실련	031-997-0044	국장 : 이종준, 간사 : 황인순
이천·여주경실련	031-635-7575	국장 : 주상훈, 간사 : 변정혜
강릉경실련	033-645-0828	국장 : 심현섭
속초경실련	033-636-6631	국장 : 김경석, 부장 : 김미정
춘천경실련	033-241-9486	처장 : 권용범, 간사 : 오연옥

충청권			
천안·아산경실련	041-552-2040	국장 : 정병인	
청주경실련	043-263-8006	처장 : 최윤정, 국장 : 이병관, 간사 : 김태희, 신명자	
경상권			
거제경실련	055-637-9451	국장 : 이상식, 간사 : 박희자	
창원경실련(준)	055-263-0030	정책위원장 : 이지영, 국장 : 오정환	
경주경실련	054-773-7851	국장 : 이원희, 간사 : 방현주	
구미경실련	054-453-1787	국장 : 조근래	
포항경실련	054-278-4637	국장 : 장정선	
울릉지회	054-791-0085	국장 : 김유길	
전라·제주권			
순천경실련	061-751-9993	국장 : 이상희	
여수경실련	061-643-2110	처장 : 박효준	
목포경실련	061-283-4571	국장 : 장미	
군산경실련	063-443-5733	간사 : 한기자	
전주경실련	063-273-4903-4	국장 : 한병규, 간사 : 권미경	
정읍경실련	063-536-6225	간사 : 김은정	
남원경실련	063-633-6662		
제주경실련	064-726-2530	처장 : 최광일	